국제개발협력

2007년 제2호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 ODA논단

1.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 7
KOICA 정책연구실

2.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KOICA의 역할 ····· 33
정기환 /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I. KOICA 업데이트

1. 신장범 KOICA 총재와 ODA WATCH 단원과의 간담회 ····· 63

2. 지구촌대학생연합 워크샵 "8가지 약속, 함께하는 MDG" ····· 70
KOICA 인사 기조강연

3. KOICA 전문가 등록 풀 구축현황 ····· 77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내동향

ㅇ 대외원조기본법 국회 공청회 ····· 83
■ 김부겸의원 발의 대외원조기본법안 관련 진술서 ····· 83
김은미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요지 ····· 87
김혜경 / 경실련 국제위원장
ㅇ ODA 관련 회의 일정 ····· 97

2. 국제동향

⑴ 국제기구

ㅇ 제 45차 OECD/DAC HLM 결과 ····· 101
ㅇ OECD 개발글로벌 포럼 결과 ····· 110
ㅇ OECD/DAC 최근 동향 : Environet 회의 결과 ····· 115
ㅇ OECD/DAC 덴마크 동료검토 회의 결과 ····· 118
ㅇ OECD 2006년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 ····· 121
ㅇ OECD 제 58차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 123
ㅇ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 : IFFIm, UNITAID ····· 136

⑵ 수원국 원조동향

ㅇ 라오스 원조동향 ····· 145
ㅇ 파키스탄 개발포럼 ····· 148

I. ODA 논단

1.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KOICA 정책연구실

2.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KOICA의 역할
정기환 /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Ⅰ. 개념 ····· 8
Ⅱ. 우리의 ODA 비교우위 요소 ····· 8
Ⅲ. 추진전략 ····· 9
1. 원칙 ····· 9
2. 기본방향 ····· 10
3. 추진전략 ····· 10

Ⅳ. 분야별 추진전략 ····· 12
• 교육 ····· 12
• 보건의료 ····· 15
• 행정제도 ····· 17
• 농촌개발 ····· 20
• 정보통신 ····· 22
• 산업에너지 ····· 25
• 환경 ····· 28
• 여성개발 ····· 30

※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은 2007년 6월 KOICA 정책연구실에서 생산한 문서임.

I. 개념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란 한국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우리의 ODA 사업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컨텐츠) 및 전략(방법론) 개발을 의미

■ 경실련 주최로 개최된 "한국형 개발협력 모형" 세미나(2007.03.29)에서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동 모형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ODA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이해

■ 동 프로그램의 사업형태나 방식은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우위부문과 수원국의 긴요한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원조의 효과성과 및 Visibility 제고에 기여

■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국제개발협력 개선종합대책"(2005)에는 "한국형 원조모델"의 개념을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 서도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닌 우리의 원조정책으로 규정

■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위치 및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원조계획 하에 우리의 우수한 개발경험을 원조 프로그램으로 개발 필요

■ 한국의 개발경험은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성공과 실패요소를 포괄하나, 원조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 구축이 긴요하므로 수혜국에게는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중점 제공

II. 우리의 ODA 비교우위 요소

1. 절대빈곤 탈출 경험보유

■ 정치 · 경제적으로 우리가 최빈국에서 압축적으로 성장한 소중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 세계적 석학인 Jeffrey Sachs교수는 ODA국제회의(2007.3월, 서울)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로 규정
- IMF 전수석부총재인 Anne Kruger도 아프리카 재무장관 회의에서 (2005년)에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모델의 최적국가"로 언급

2.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지원체제 소유

■ 우리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중 · 저급의 기술과 함께 이를 전수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노하우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개발 장애요소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

- 선진공여국이 개도국의 현지실정에 부적합하게 원조하여 지원효과가 반감된다고 비판

(Steven Browne "Foreign Aid in Practice")

- 우리는 부존 자원부족, 전쟁으로 피폐된 산업기반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개발 노하우 및 기술과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인적자산을 보유

3. 신축적인 ODA 운영

■ 신흥 공여국인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전략 및 집행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 수원국의 수요에 대해 신축적 대응이 가능

- 선진 공여국은 확립된 원조 사이클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추진과정 및 절차가 경직적이어서 수원국 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곤란

4. 한국 ODA에 대한 신뢰감

■ 침략경험을 가진 선진국과 달리 한국 원조는 동기면에서 보다 순수하게 개도국에게 인식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로 인해 이들 국가간 갈등적 요소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

III. 추진전략

1. 원칙

가. 호혜성

■ 공여자로서의 한국과 수요자로서의 개도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원조 형태 및 방식 제공

-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일방적으로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원국의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아 지원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음

나. 규범성

■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개발목표(MDGs)와 절차(OECD/DAC기준)를 충족

- 최근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합의된 파리선언은 국제규범으로서, 2010년까지 모든 공여국의 준수 필요

다. 구체성

■ 원조형태나 방식은 프로그램 가능(programmable) 하고 구체적(tangible) 이며, 측량 가능(measurable) 해야 함

-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중 수원국의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지원효과 측정도 가능한 원조 형태나 방식

2. 기본 방향

가. 우리의 차별성 부각이 가능한 분야

■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가 가능한 분야

–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ODA 개선방안에서는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로 경제개발 경험 (경제기획 등), 빈곤퇴치 (보건위생,환경 등), 인적자원개발 (교육,직업훈련 등), 인프라 구축, IT분야 등을 제시

나. 우리의 ODA규모 및 공급능력 감안

■ 우리의 전문성과 노하우의 적절한 활용(공급측면)이 가능한 분야

– 비교적 중간수준의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협력

다. 사업효과가 증명된 분야 집중

■ 현재까지 실시된 사업 중 객관적 평가에 의거, 사업효과가 증명된 분야

– KOICA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평가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에 집중

라. 국제사회의 추진방향 감안

■ DAC, UN 등 국제적 개발주체가 중점 추진중인 분야 중 우리의 역량 범위 내 동참을 통해 visibility 유지와 사업효과 거양이 가능한 분야

3. 추진전략

가.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Comprehensive package)

■ 사업별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개도국의 개발수요 및 분야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사업목표 및 이의 달성 수단을 설정하는 종합적 사업추진 방식 필요

나. 수원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각 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상황과 정책관리 능력, 기술 수준, 원조의 흡수능력 등을 감안한 국별 프로그래밍 개발

– 각국의 분야별 우선순위, MDGs와의 연계성, 우리의 공급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국별 matrix 작성 및 적용

다. 심도있는 국별/분야별 정책 연구

■ 개도국의 국별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원조를 위해 우리의 공급능력과 개도국의 특성 및 개발수요 분석 강화 (충실한 국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원조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조사 사업 활성화

라 전략적 원조 실시 및 평가 강화

■ 개발단계와 우리나라와의 근접성, 경제협력 효과, 국별 특성 등을 감안한 전략적 원조정책 개발 및 적용

■ 원조사업의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모범 사례 적극 발굴

마. Hardware와 Software(기술협력)의 효율적인 연계

■ 인프라 건축 중심의 Hardware 원조와 지원 효과가 높은 기술협력 (연수훈련, 전문가 파견 등)간 유기적, 효율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바. NGO, 기업 등 민간부문간 파트너십 강화

■ 시민사회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호혜적, 보완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사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

– 특히, 개발NGO는 중점협력대상국 및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상호간 보완적 역할 수행

■ 개발원조 컨설팅 육성 등 원조산업(aid industry) 활성화

사. 중점 거점지역 선정

■ 지역별 시범지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업을 집중 지원한 후 효과가 검증(평가)된 우수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집중 홍보 및 전파

아. 빠른 효과(Quick Impact) 거양이 가능한 사업 추진

■ Project Cycle 경직성을 탈피하여 즉시적 원조효과 거양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 적극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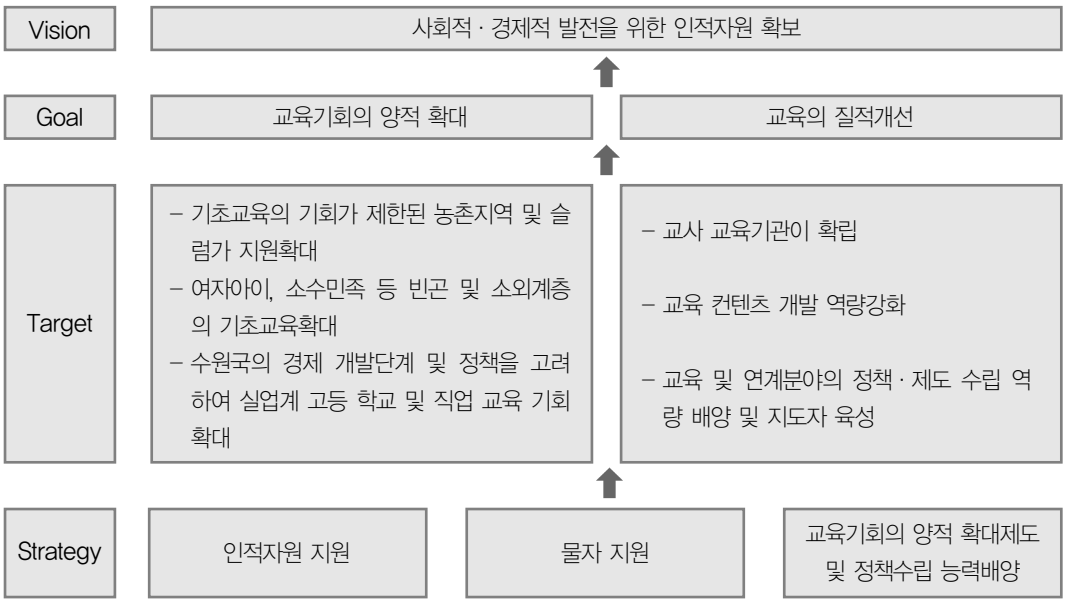
자. 사후관리 강화

■ 지난 16년간 KOICA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기존의 협력기반(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노력

IV. 분야별 추진전략

교육 분야

1. 전략 체계도



2. 전략 및 비교우위

가. 인적 자원 지원

■ 우리나라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를 기반으로 각 교육단계별 교사자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기관 및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립한 경험이 있음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기관을 설립하고 분야별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

■ 수원국 기술 수준에 부합되는 방송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방송통신대학교 또는 교육방송국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낙후된 개도국 지역의 교사교육, 직업훈련 교육 및 고등교육을 보완한 경험활용

나. 물질적 자원 지원

■ 우리나라는 보편적 교육을 위해 한정된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험 보유함

– 초등학교(1957), 중등학교(1979), 고등학교 ·

실업계 고등학교(1985), 대학교육(1990)에 거쳐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단기간 내의 완전 취학을 달성함

다. 제도 및 정책 수립 능력 배양

■ 우리나라 상향식 단계적 교육기회[1] 확대전략을 통해 사회 및 경제 개발정책에 부합된 교육정책을 세워 단시일 내에 사회 및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저소득 – 낙후지역에 교과서 무상공급과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우선 확대하는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여 균등한 사회발전을 일구어낸 경험이 있음[2]

3. 세부전략

가.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

1) 인적 자원 지원

■ 보편적 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교원 및 교육행정 담당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원국 내 교사 및 교사육성 기관 지원

■ 국내 연수를 통해 직업훈련 및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양성

2) 물질적 자원 지원

■ 보편적 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교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교육 설립 및 보수

■ 초 · 중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교육소모품, 급식 및 기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제공 Jeffery Sachs가 주장하는 Quick Hit의 하나로 UNCIEF, USDA 등이 참여하는 "Food for Education" 프로그램 및 회원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시행되고 있음

■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육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3) 제도 및 정책 수립 능력배양

■ 우리나라 보편화교육, 교원양성 등 교육의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교육정책 및 제도에 경험 전수

나. 교육의 질적 향상

1) 인적 자원 지원

■ 교육대학, 교사연수기관 또는 재교육기관에 교사 교육자 또는 교수에 대한 학업 및 연구지원을 통해 교과과정,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수법 및 과목지식 향상

---

1) 한국교육개발원에 2006년도 "국제교육지원 전략보고서" 에 의하면 초등교육부터 시작하여 중등교육으로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단계적으로 경제개발전략과 교육정책과 연계시킨 협응 관계를 의미함

2) "국제교육지원 전략보고서" 2006년도 한국교육개발원

프로그램화의 예시

□ 000지역의 여자 아이 기초교육의 지원 프로그램
- 여자아이들의 취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급식 및 교육소모품 지원 프로젝트
- 보수적인 문화권에서의 여아취학률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교사 양성 프로젝트
-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인근지역에 여자아이들을 위한 초·중등 교육시설 건립 프로젝트

프로그램화의 예시

□ 수원국 내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산업화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파견
- 우리나라 연구기관 또는 대학원에서의 장기 연수
- 우리나라 연구기관(교육대학원, KEDI 등) 및 수원국 유관기관에 대한 공동 연구지원 제공

2) 물질적 자원 지원

■ 교사 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수원국의 방송통신기술[3]을 활용한 교사 및 학생들의 보조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자재 및 인프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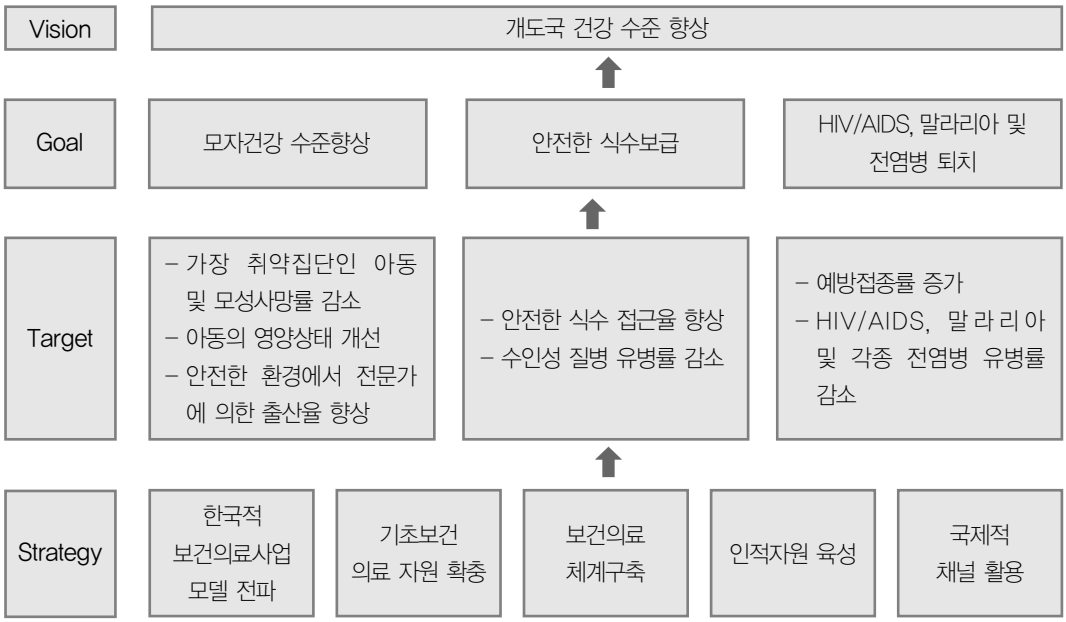
3) 제도 및 정책 수립 능력배양

■ 교육 및 교육과 연계된 분야(경제, 과학기술 등) 정책 결정자 및 지도자 양성

3) 수원국 및 수원국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라디오, TV 및 인터넷을 통한 기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우리나라의 예로는 교사 교육을 위한 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방송 프로그램이 있음

보건의료 분야

1.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개도국의 건강수준 향상

■ 보건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은
- 인간의 기본권 보장
- 질병 - 빈곤의 고리를 끊음
- 국가 의료비 절감, 가계지출 감소, 노동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 및 빈곤완화에 기여

나. 목표

1) 가족계획 및 모자건강 수준 향상

■ MDGs Goal 4. '아동사망률감소'

■ MDGs Goal 5. '모성건강증진'

2) 안전한 식수 보급

■ MDGs Goal 7의 세부목표 10. 안전한 식수확보

3) HIV/AIDS, 말라리아, 결핵 퇴치

■ MDGs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3. 추진전략

가. 기본 방향

■ 한국적 보건의료사업 모델 전파
■ 기초보건 의료자원 확충
■ 보건의료체계 구축
■ 인적자원 육성
■ 국제적 채널 활용

나. 추진 전략

1) 건강 수준 향상

■ 한국적 보건의료사업 모델 전파
– 세계적 성공사례인 가족계획 사업 적용 및 확산
–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을 적용한 지역 보건사업개발 및 확산

※ 1960년대 국가시책으로 도입된 가족계획은 성공적인 산아제한의 사례로 손꼽힘
• 1970년대 : 4.5% ⇒ 1990년대 : 1.6%

※ 1960~70년대 새마을 부녀회, 재건 부녀회, 가족계획 어머니회 등 여성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중심 피임보급 등의 사업을 펼쳤음

■ 기초보건의료 자원확충
– 보건의료 역량에 따른 단계별 보건의료 시설 확충
– 아동 및 여성 중심의 의료기기 및 필수의약품, 영양제 등 지원

■ 보건의료 체계 구축
– 효율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술지원

■ 인적자원 육성
– 자립발전 및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2) 안전한 식수 보급

■ 기초보건의료 자원 확충
– 아프리카 한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물 사업

※ 많은 NGO 및 종교단체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우물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바 동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실시 권고
• 팀앤팀인터내셔널, 지구촌공생회, 굿네이버스, 플랜한국위원회, 한국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 보건의료체계 구축
– 식수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인적자원 육성
– 식수 및 위생 관련 다양한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3) HIV/AIDS, 말라리아 및 전염병 퇴치

■ 한국적 보건사업 모델 전파
– 우리나라 기생충, 홍역 퇴치 경험을 통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적용 및 확산

■ 보건의료체계 구축

– 전염병 감시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 인적자원 육성

– 자립발전 및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우리나라 보건소의 주요 업무 : 전염병 예방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 전염병 예방사업의 경우 투자효율이 높고 경제적 부의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
- 보건소의 전염병 관리는 국민의 평균수명을 40대에서 60대로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

■ 기초보건의료 자원 확충

–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의약품 및 장비 지원

– 우리나라 생산 가능한 예방접종 백신 보급

※ 우리나라 벤처기업 (주) SD는 HIV/AIDS 진단시약을 WHO로부터 품질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UNAIDS에 진단 시약을 등록하고 납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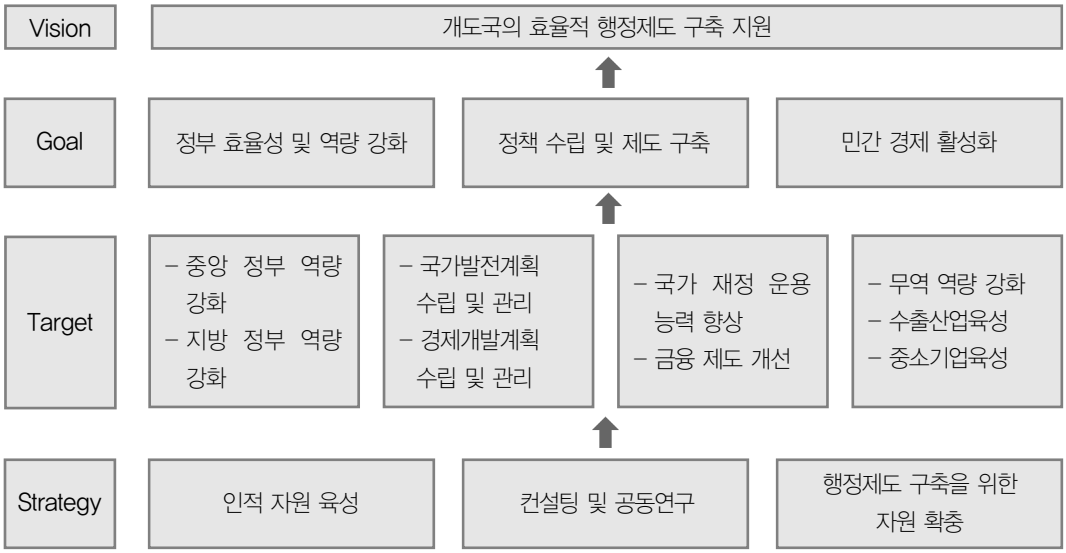
■ 국제적 채널 활용

– AIDS 치료제, 전염병 백신개발 사업 및 의약품 보급에 참여

– AI, SARS 등 신종 전염병 발생시 국제적 공동대응 동참

행정제도 분야

1.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개도국의 효율적 행정제도 구축 지원

■ 효율적 · 효과적 행정제도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전제조건(essential precondition)

■ 효율적 행정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발정책 추진은 수원국에 부패와 비능률을 양산시켜 총체적 '정부 실패'를 초래

■ 개도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은 "자본격차"가 아닌 "정책 및 제도격차(Assessing Aid/세계은행, 1998)"

나. 목표

1) 정부 효율성 및 역량 강화

■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세부목표 12. 'Good Governance 구축'

2)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세부목표 12. 'Good Governance 구축' / '개방적이고, 규칙에 근거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체제 발전'

3) 민간 경제 활성화

■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세부목표 12. '개방적이고, 규칙에 근거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체제 발전'

3.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인적 자원 육성
– 연수생 초청사업 및 워크샵 개최

■ 컨설팅 및 공동연구
– 전문가 파견 및 수원국 공무원과 Task Force Team 운영

■ 행정제도 구축을 위한 자원 확충
– 전자정부, DB 구축 및 사무 기자재 지원 등

나. 추진전략

1) 정부 효율성 및 역량 강화

■ 행정능률 향상 지원(사무자동화, 전산화 및 행정 DB 구축)

■ 공무원 제도 및 능력 개발
– '우수한 관료와 정부의 지도력'은 한국경제

의 주요성장요인(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

■ 중앙 및 지방정부 전자 정부 구축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UN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극찬을 한 우리의 전자정부시스템 중심의 IT 서비스분야는 해외진출의 유용한 수단으로 부각

※ 조달(나라장터) : UN 공공서비스상('03), 공공조달 Best Practice Model('04) / UN e-Government Readiness 평가('05) : 한국 세계 5위 / 법무부(출입국 시스템) : UN 공공서비스 수상('07)

2)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 경제 정책 및 개발 전략 수립과 운영

– 경제성장, 수출, 급속한 공업화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과는 "경이적"인 것(이기준 '국가 경제정책의 제도적 기반 / 한국의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2005)

■ 거시경제 관리, 시장경제 제도 구축 및 운영

– 이종원('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은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추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서 그 성과가 양적 ·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며 괄목할만한 높은 경제성장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

① 수출주도형공업화 기반구축('60년대) ②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70년대) ③거시적안정과 자율화 추구('80년대) ④개방화, 자율화, 분권화 시도('90년대)

■ 경제 통계 작성 및 관리

– 한국정부의 성공적인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통계자료 수집의 신빙성과 통계분석의 질적 수준이 5개년계획을 통해 크게 향상(이기준 '국가 경제정책의 제도적 기반 / 한국의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2005)

■ 예산 행정 및 예산 제도 개선

■ 조세 정책과 세무 행정역량 강화

■ 외환관리 및 구조조정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후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둠→대외신인도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 제조업의 부채비율 감소 등(김경원, 권순우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민간 경제 활성화

■ 수출 진흥 정책

– 이종원은 한국경제의 주요성장요인으로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언급. 또한 "국제부문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외지향적 무역정책이 수행되기도 한 핵심부문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부문"으로 평가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

■ 무역 제도 구축 및 무역 자유화

– 대외교역은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었음 (박진근 '무역정책과 외환정책/한국경제론 강의' 세계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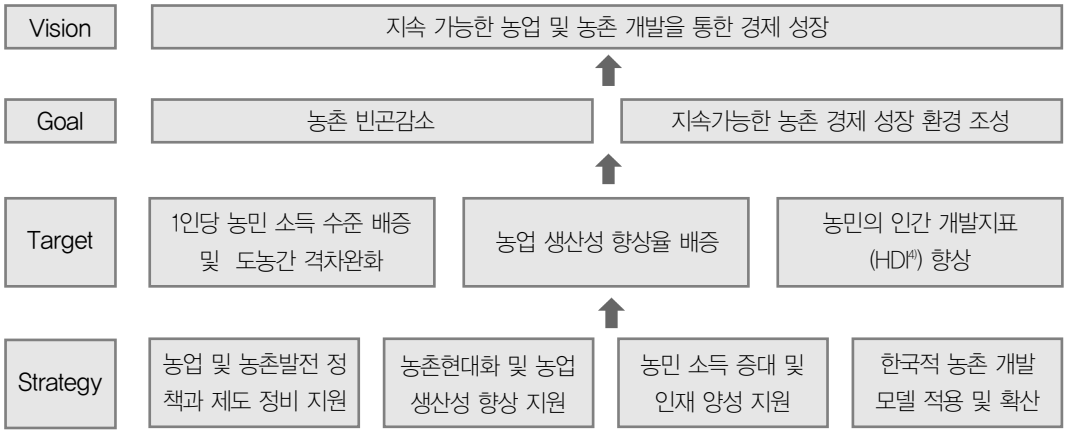
■ 중소기업 육성

–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왔음. 그 결과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등에 기여했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외형적 성장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6)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지원 종합안내서'를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안내 및 재정자금 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관련 법령 및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

농촌개발 분야

1. 전략 체계도



4) HDI는 Human Development Index의 약어로 UNDP에서 매년 각국의 평균 수명, 문맹률, 취학률,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 순위를 정해 발표한다. 한국은 2006년 기준 26위였고, 지난 28년간 HDI 상승률이 세계1위였다.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 10억명에 달하는 절대빈곤 인구의 75%가 종사하는 농업 및 농촌 개발을 통해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경제성장 달성

나. 목표

■ 농촌 빈곤감소
- 국가차원의 우선적 농촌 빈곤감소 전략 및 정책 수립
- 지역주민의 자립심 고양
-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기초 보건 및 교육, 안전 등 개발 환경 조성
-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민의 소득수준 향상

■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 성장 환경 조성
- 도농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 수립 및 실천
- 환경 친화적 농업 기술 개발 및 적용
- 농민의 소득수준 향상
- 농업 및 농촌개발관련 기관능력 배양과 인재 양성

3. 추진 전략

가. 기본방향

■ 농업 및 농촌발전 정책과 제도 정비 지원

■ 농촌 현대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 농민 소득 증대 및 인재 양성 지원

■ 한국적 농촌개발 모델의 적용 및 전파

나. 추진 전략

1) 농업 및 농촌 발전정책과 제도 정비 지원

■ 친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효과적 빈곤감소 전략 수립 지원
- 산업화와 병행한 균형적 경제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

■ 단기간에 도농간 격차 해소와 식량자급을 실현한 우리의 성공적인 농업 및 식량 증산 전략 및 정책 전수

■ 모범적 한국의 지역(농촌) 개발모델 도입 및 확산과 실행을 위한 정책 지도

2) 농촌 현대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 농민의 BHN 충족 및 농촌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우선 지원
- 식수, 기초 교육 및 보건위생 등 지역주민의 기본욕구 우선 충족
-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시설, 장비 지원

■ 농기계 제공과 운용능력 배양 등 농업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 농지조성 및 농로건설,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 인프라구축 지원

■ 농업 및 농촌개발에 관련된 기관능력 확충 지원

3) 농민 소득 증대 및 인재 양성 지원

■ 농민 소득창출 및 농민의 자조 노력 지원 정책과 노하우 이전

– 수익성 농작물 재배, 가공, 보관, 판매 기술 및 노하우 기술 지원

■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 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기법 전수

– 쌀, 축산물, 채소 및 과일, 특용작물 등 영농 경험 및 기술 이전

■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수립과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 농민 및 정책 당국자의 낮은 인식수준과 자립심 부족은 농촌개발에 대한 구조적 장애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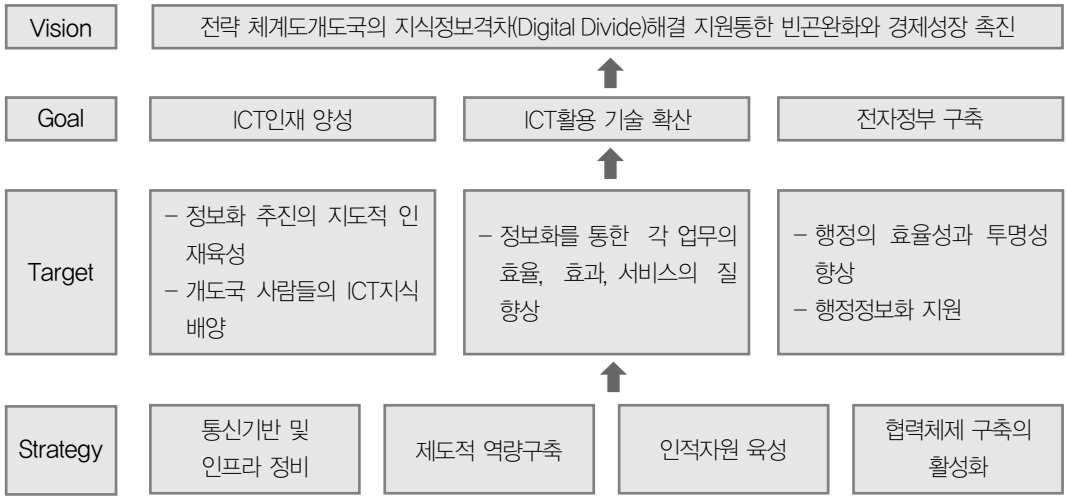
4) 한국적 농촌개발 모델의 적용 및 확산

■ 성공적 농촌개발 사례로 브랜드화 된 우리의 "새마을 운동" 모델은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종합적 지역개발 모델

■ 개도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촌개발 컨텐츠의 체계적 개발 및 전파

정보통신 분야

1.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개도국의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해결 지원 통한 빈곤완화와 경제성장 촉진

■ 개도국의 정보통신 분야지원을 통해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해결
-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통한 생산성, 생활의 질, 주민서비스의 향상

나. 목표

■ ICT인재양성
- 개도국 사람들의 ICT이용 능력향상 및 기술자, 전문가 양성
- MDGs Goal 2.의 세부목표 3. ICT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사 및 학생교육, 빈곤여성의 문맹퇴치 교육 가능

■ ICT활용기술 확산
- ICT 활용을 통해 각 분야의 효율, 효과, 서비스 향상
- MDGs Goal 8.의 세부목표 18. 민간분야와 협력, 정보통신 등 신 기술 혜택 확산

■ 전자정부구축
- 개도국 정부부처 및 각 기관의 행정 효율성 제고
- MDGs Goal 8.의 세부목표 18. 민간분야와 협력, 정보통신 등 신 기술 혜택 확산

3.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1) 통신기반 및 인프라정비

■ 한국은 공공부문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5위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ICT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확대 등 전통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음[5)]

2) 제도적 역량구축

■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성공은 정보화촉진기금 등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40년 이상의 주도면밀한 산업정책추진 역량의 결과임[6)]

3) 인적자원 육성

■ 국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 등의 정보문화 확산 및 건전정보화 정책으로 정보 문화의 저변확대를

5)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KOICA,2007
6) 「ICT협력사업 추진전략」KOICA 2005

이룬 것은 한국의 성공사례임[7]

4) 협력체제 구축의 활성화

■ 한국은 정보문화진흥원(KADO), TFT, 학계, 사업체 및 기타 전문가와의 협력체제 구축 아래 통신서비스의 보급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달성했음

나. 추진전략

1) ICT 인재양성

■ 통신기반 및 인프라정비

- e-Learning, 사이버교육 시스템구축 지원
- ICT교육센터, 연구소 및 대학 내 컴퓨터센터 건립사업

■ 인적자원 육성

- 초중고, 대학의 컴퓨터교육 및 커리큘럼작성 지원
- ICT교육센터 관리자 및 강사연수
- 한국해외봉사단(KOV) 파견통한 IT교육

■ 협력체제 구축의 활성화

- 국내 ICT관련기관과의 협력아래 교육연수, 봉사단파견 사업실시

2) ICT 활용 기술 확산

■ 통신기반 및 인프라정비

- 네트워크, 무선통신망 구축
- 원격진료, 전자상거래, e-Library 시스템 지원

■ 제도적 역량구축

- 한국형 성공모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인적자원 육성

- 모바일, 광, 인터넷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장단기 초청연수
- 분야별 ICT활용기술지원 위한 기술자문, 전문가 파견

■ 협력체제 구축의 활성화

- 국내 ICT관련기관, 학계, 민간 ICT기업과 협력하여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3) 전자 정부 구축

■ 통신기반 및 인프라정비

- 정부부처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 전자조세행정, 전자조달, 전자통관 (UNI-PASS)제도의 통신망[8]

7) IT분야 및 전자정부시스템 개발경험 전수 · 판매 활성화대책' 정보통신부, 2007.6

8) 구축 KOICA의 전자정부 사업에는 라오스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04-' 05/950천불), 한-캄보디아 전자정부추진 협력사업, 몽골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수립사업('05-' 06/600천불),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지원사업('07-' 09/5,200천불), 가나외교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07-' 08/1,500천불)등이 있음

■ 제도적 역량구축

– 정부의 장단기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위한 전문가 파견

■ 인적자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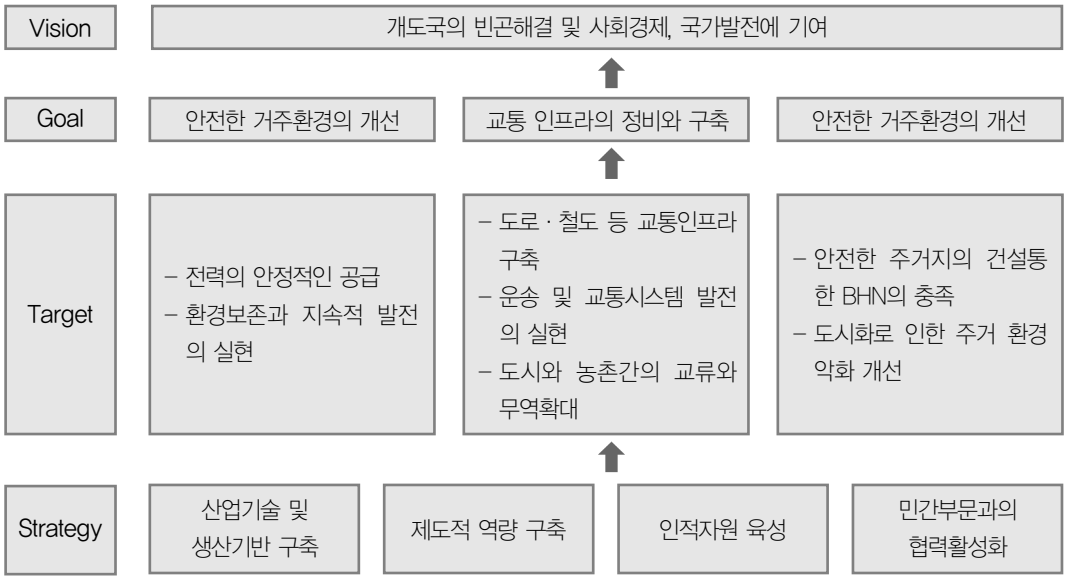
– ICT정책수립 능력향상 위한 개도국 정책결정자와 CEO대상 연수

■ 협력체제 구축의 활성화

– 정보통신부, 학계, 민간 ICT기업과 협력하여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산업에너지 분야

1.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개도국의 빈곤해결 및 사회경제, 국가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산업에너지 분야지원을 통해

–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해결

– 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저축과 투자확대가 기대됨

– 민간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목표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 전력의 양적확보, 공급지역의 확대,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
- MDGs Goal 1의 세부목표 1.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 교통인프라의 정비와 구축
- 운송교통 인프라 건설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 MDGs Goal 1의 세부목표 1.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 안전한 거주 환경의 개선
- 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의 해결
- MDGs Goal 7의 세부목표 11. 슬럼거주자들의 생활여건의 개선

3.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산업기술 및 생산기반구축
-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및 세계적 전력공급 기술 보유('05.9「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산자부)
- 91년-06년까지의 KOICA 산업에너지 부문 53개 개발조사 사업 중 총 17건(32%)이 전력 에너지임

■ 제도적 역량구축
- 알제리 산업비전 2015와 같이 세부분야별 사업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대상국가의 산업정책 수요 충족시킴[9]
- 한국은 도로 · 철도 ·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과 LNG버스, 경전철 등 미래형 교통수단 지원 기술을 보유(EDCF)

■ 인적자원 육성
- 한국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적극적인 신기술의 도입 · 활용 및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10]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활성화
- 한국전력은 전력개발 부문에서 4건의 KOICA 개발조사사업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세계은행이 발주한 '캄보디아 전력망 마스터

9) '산업자원 분야의 개발경험 전수 · 판재 활성화 방안' 산자부, 2007.6
10)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KOICA,2007

플랜 수립' 개발조사 사업을 수주

– KOICA의 99-01년(1천불)), 01-02년(1천불)의 개발조사 후, '06년에 대우건설이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대원, 동일하이 빌딩과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권 수주. 63만평 택지조성 후 아파트, 주택 및 사업 센터 건립 예정

나. 추진전략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 산업기술 및 생산기반구축

– 발전소건설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사업, 건설사업

– 전력계통 운영 및 보호시스템 구축

■ 제도적 역량구축

– 에너지 산업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 제도 구축지원

– 전문가 파견 (전력시설 운전, 발전 및 송배전 시스템 기술전수)

– 친환경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기술전수

■ 인적자원 육성

– 부처관계자, 기술연수생 대상으로 한 원전기획 및 산업관리 연수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활성화

– 한국전력 및 민간컨설팅 회사와 개발조사사업을 협력

2) 교통 인프라의 정비와 구축

■ 산업기술 및 생산기반구축

– 철도연결,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 저개발국가의 비포장도로 개선사업

– 교통관리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

■ 인적자원 육성

– 부처관계자, 연수생 대상 철도운영 현대화, 운용기술연수

– 현지 기술센터의 설립과 운영지원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활성화

– 개발조사사업을 철도, 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및 민간컨설팅 회사와 공동실시[11]

3) 안전한 거주 환경의 개선

■ 산업기술 및 생산기반구축

– 무주택 빈민층 대상 주택 건축제공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11) • KOICA의 대외무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이 베트남 "나짱~호찌민간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음. 08년4월까지 (주)청석엔지니어링과 2단계 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임

• KOICA에서 아세안5국(태국-미얀마) 철도연결 타당성조사사업 실시('04~' 07/1,200천불)

■ 제도적 역량구축

– 주택개발전문가 파견 통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 자문

■ 인적자원 육성

– 중앙부처 공무원대상「주택정책과정(Housing Policy)」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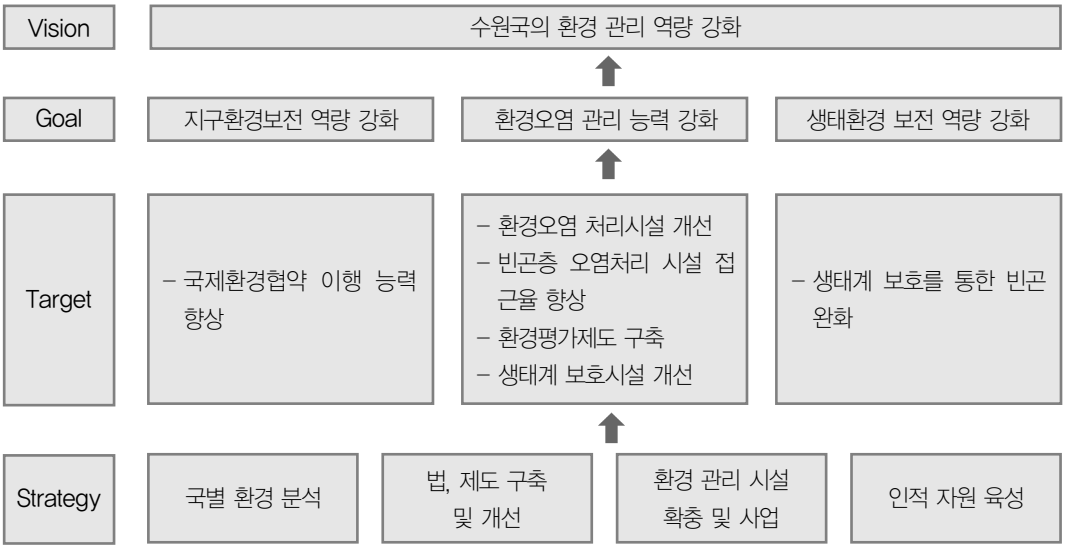
– 빈민지역 대상 주거환경 개선 및 위생병 예방연수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활성화

– 개발조사 및 건설 · 시공 사업을 국내 건설업체와 협력

환경 분야

1.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성취

■ 건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황사 등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 국가를 초월한 범지구적 이슈

■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개발(남벌로 인한 산림 황폐, 홍수, 토양 유실, 농업 기반 약

화)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고, 저개발로 인한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초래됨

나. 목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 MDGs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세부목표 10.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환경자원의 손실 보전" 과 부합

3.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국별 환경 분석
■ 법 · 제도 구축 및 개선
■ 환경 관리 시설 확충
■ 인적자원 육성

나. 추진전략

1) 지구환경 보전 역량 강화

■ 국별 환경 분석
- 중점 지원 분야 선정
- 수원국 필요분석결과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 국제환경협약 이행능력 강화 ⇒ 사막화 및 황사 방지

: 중국의 황사 관측망 구축사업(2006-2007사업),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사업(2007-2010), 몽골의 조림사업

■ 인적자원 육성
- 환경 협약,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 전수

: 중국 환경보전 전문가 파견 (2007)

2) 환경오염 관리능력 강화

■ 국별 환경 분석
- 중점 지원 분야 선정
- 수원국 필요분석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수립

■ 법 · 제도 구축 및 개선
- 수원국 환경관리법 · 제도 개선지원
-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지원

■ 환경관리시설 확충
- 환경오염관리시설 시범건립
- 상수처리 및 생활, 산업, 축산 등 폐수관리시설 지원사업

※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04년 현재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증가했음. 이는 약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으로 이어졌고, 소각, 매립 대상 폐기물이 감소하여 매립지 침출수 감소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국토환경(토양, 대기 등) 보전효과가 발생

■ 인적자원 육성

– 오염관리시설 관련 기술 및 운영기법 전수
: 대기질, 교통체계 정책분석 및 자문

–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확인 · 평가 체계분석 및 자문

※ 한국도 과거 석탄 사용시 발생하는 황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했으나, 저황유 공급 확대, 청정연료로의 전환, 탈황 장치 보급 등으로 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개선되었음.

3) 생태환경 보전역량 강화

■ 국별 환경 분석

– 중점 지원 분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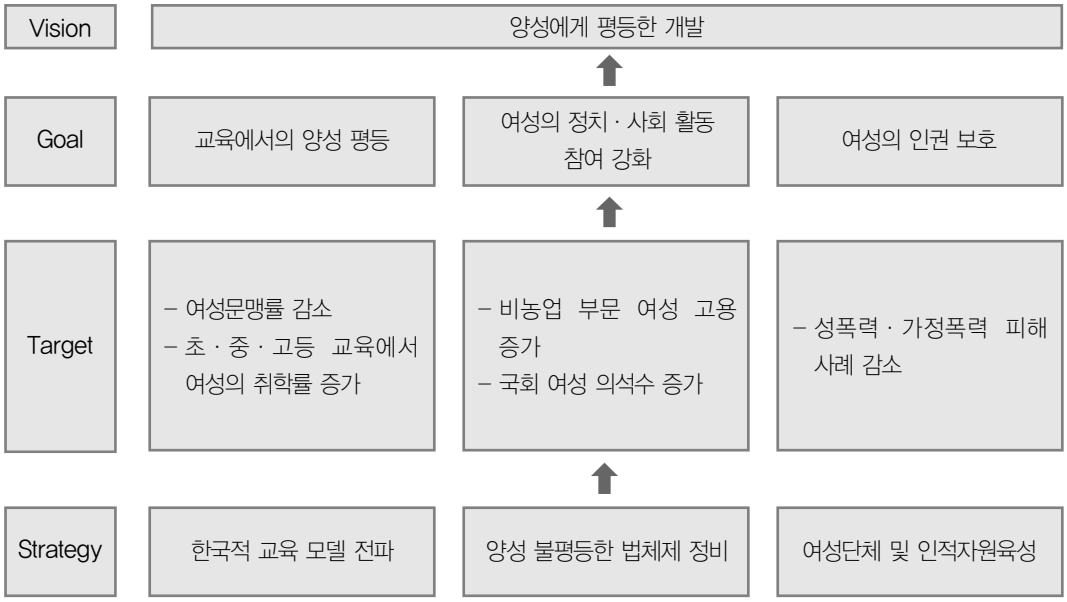
– 수원국 필요분석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수립

■ 환경관리시설 확충

–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 강화사업(2007–2009)
코스타리카 생물자원 공공연구센터 건립사업(2006–2007)

여성 분야

1.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양성에게 평등한 개발

■ 개발에서의 양성평등은
- 여성 역할 증진을 위한 전략적 목적이며, 지속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개발목표임
  - 1995. OECD/DAC HLM 'Gender Equality : Moving Toward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 자원 · 기회 ·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철폐, 평등한 권리의 증진

나. 목표

■ 교육에서의 여성평등
- MDGs Goal 3의 세부목표 4 :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를 초 · 중등교육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서는 2015까지 제거

■ 여성의 정치 · 사회활동 참여 강화
- MDGs Goal 3의 지표 : 비농업부문의 여성고용 비중 (ILO), 국회 여성 의석 비중 (IPU)

■ 여성의 인권 보호
- MDGs Goal 3 :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3.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한국적 교육 모델 전파

■ 양성불평등한 법체제 정비

■ 여성 단체 및 인적자원 육성

나. 추진전략

1) 교육에 있어서의 여성평등

■ 한국형 교육 모델 전파
- 여자학교 설립으로 인한 여성의 취학률 증가
- 의무교육제도 도입으로 취약 계층 및 여아의 교육기회 확대
- 급식제공으로 빈곤계층 및 여아의 취학률 증가 유도

※ Cash and in-kind subsidies, such as school meals using locally produced foods for extremely impoverished households, orphans, and girls, can promote school attendance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 Investing in Development .

■ 여성단체 및 인적자원 육성
- 여성 교육 전문가 양성

– 여성 직업능력 강화사업 관련 국내초청 연수

2) 여성의 정치 · 사회활동 참여 강화

■ 양성불평등한 법체제 정비

– 수원국의 양성평등 정책 · 법 · 제도 개선 지원

■ 여성단체 및 인적자원 육성

– 양성평등전문가 및 여성 지도자 육성 사업

–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 정부 여성공무원 및 여성단체 국내초청 연수
: 여성관리직 공무원 리더쉽 향상 국내연수 (2007)

3) 여성의 인권 보호

■ 양성불평등한 법체제 정비

–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단체 및 인적자원 육성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KOICA의 역할※

정 기 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Ⅰ. 서 론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빈곤이다. 가난한 국가 일수록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불비하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높은 실업과 저소득, 오염된 식수와 위험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기반 시설 개선과 농업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안전한 식수의 공급, 기초 의료서비스의 제공, 산림녹화와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개도국 농촌의 빈곤 해소와 농촌개발을 위한 핵심과제가 된다.

지난 25년간 세계의 빈곤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UN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10억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 인구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그 중 70%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농촌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OECD 회원국이 되는 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성공사례다. 특히 한국이 1970년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지

※ 본고는 2006. 4.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하에 개최된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 전략 세미나" 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걸어온 농촌개발 경험, 특히 새마을운동은 국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 평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을 빌어 박정희 대통령이 창안한 국민운동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정력을 빌어 강제적으로 국민을 동원시킨 운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고, 둘째는 가난을 털어 버리고 조국을 잘사는 근대적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국민운동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성공적으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국민운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아직도 국내 학자들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1970년대의 새마을정신은 1980년대 이후 변질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그 명맥마저 끊어질 위기를 당했고 최근에 시민운동으로 재탄생했지만 지역사회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본래의 새마을정신이 손상당한 채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새마을운동은 유신의 잔재로, 군사 독재정권시대에 있었던 국민동원 운동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대조적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1970년대까지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근대적 국가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한 지역개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UNESCAP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동남아시아 최빈국들이 당면한 빈곤을 탈피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아시아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UNESCAP은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파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KOICA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걸쳐 베트남에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농촌 새마을운동 방식이 베트남 농촌이 당면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개발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2007년부터 5개년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베트남 새농촌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5년 10월 11일, 중국 공산당 제16차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운동을 중국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신농촌건설계획

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OICA가 실시하는 대개도국 공적 원조사업에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왜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유신과 독재의 잔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개발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도입하려고 하는가?

Ⅱ. 왜 새마을운동인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도국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와 빈곤을 유발시키는 원인과 환경은 1960-70년대의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즉, 1960-70년대의 한국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촌지역의 인프라가 불비하여 농업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농촌주택은 생활하기에 불편하였으며 화장실은 불결하고 식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산에 나무가 없어 홍수와 가뭄이 번갈이 찾아와 농업생산성은 지극히 낮았다. 1961년도의 한국은 국민 1인당 GNP가 81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1970년대까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이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농업 생산성을 높여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빈곤의 늪에서 탈피했다.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개발경험, 특히 1970년대에 식량부족과 빈곤의 늪을 극복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의 농촌개발, 특히 새마을운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일까?

1. 주민 참여에 의한 농촌 생산기반 구축

1970년도에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불과 2~3년의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71년부터 1982년까지 추진된 새마을운동에 총 5조 2,58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가 51%를, 주민이 49%를 투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무부 1982).

개발도상국가의 농촌개발은 그 재원을 거의 정부나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총 투자 재원의 49%를 주민이 부담하였고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개도국이 당면한 식량문제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농촌도로 개선, 용수개발과 소규모 댐 축조, 수리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경지정리 등은 모두 농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능력이 부족하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세계은행이나 선진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여 농촌 생산기반 정비에 투자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재정력이 취약한 국가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농촌 주민들이 협동과 자조정신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식량문제와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성공적인 빈곤 퇴치

한국의 경우,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 투자된 재원 중 44.0%가 소득 증대 분야에, 29.0%가 복지환경 분야에, 21.0%가 생산기반 분야에, 4.0%가 정신계발 분야에 투자되었다. 1971년도에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8.8%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2년도에는 103%로 향상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67년도에 34%에 달했던 농촌지역의 절대빈곤은 1988년도에 6%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ung and Oh, 1994).

개발도상국가들은 UN이 제시한 MDGs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마을운동은 UN이 제시하는 MDGs 중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촌 주민들이 자조, 자립과 협동정신 하에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중 곡가제 도입, R&D 개발 투자 확대 등 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3. 의식 개혁

새마을운동의 결과는 물적 성장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마을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한 경우가 흔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거나 선진국의 원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주 · 자립 정신이 결핍된 경우가 흔하다. 이

러한 자신감의 상실과 대 정부 혹은 대외 원조기관에 대한 의존적인 상태로 서는 자신의 지위 향상이나 마을 지역사회 개발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 주민이 오랫동안 숙명처럼 여겨왔던 빈곤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스스로 노력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자신감이나 협동정신 혹은 자주적인 개발의지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졌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획득되고 강화된다.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spirits)"는 정신적 자신감은 한국사회가 1970년대의 빈곤을 털어버리고 근대적 지역사회로 거듭나게 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4.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열정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개념이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다.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도입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대부분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의 공급(better public service)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들은 공공부문, 특히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를 제거하고 투명한 행정 관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개발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거버넌스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버넌스는 주민참여(people's participation), 주민들의 의사결정(people's empowerment)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게 되며 보다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를 제공하게 된다.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42달러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소득 240달러 수준의 주민들이 밑으로부터의 접근(bottom-up approach)방식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농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1971년 당시 한국의 농촌은 지극히 침체 되어 있었으며 농촌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했고 정부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었다.

1971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던 농촌 주민들에게 세멘트 350포대와 철근 0.5톤을 제공하여 마을 개발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로부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끌어냈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참여(participation)가 일어났고, 마을의 일을 주민들이 토론 과정을 거쳐 스스로 결정하고(empowerment), 이 결정을 주민 스스로 실행에 옮겼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마을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되, 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 단위 공무원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평가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정부와 주민이 함께 일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지역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추진해 온 과정은 UN등 국제기구가 힘들여 도입하고자 하는 거너넌스 모델과 시스템적으로 유사하다.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농촌 주민들의 관리 능력 향상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지방정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개발해 나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국제기구와 원조기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방법론을 실천하게 된다.

첫째,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방법론이 적용된다.

둘째,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권한(empowerment)을 갖게 된다.

셋째,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므로 어느 국제기구가 실행하는 과제보다도 주인 의식(project ownership)이 고양된다.

넷째, 새마을운동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속성과 실천과정은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프로젝트의 관리능력을 배양(capacity building)시키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할 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마을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적 개발(particicpatory development),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형성, 주인의식(project ownership) 고양을 가져 오게 되어 주민들의 관리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과 사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지니는 효율적인 농촌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Ⅲ. 새마을운동은 무엇인가?

1. 어떻게 탄생했는가?

한국의 새마을운동 관련 학자들의 다수가 1970년대에 추진된 농촌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이 보여 준 근면, 자조, 협동의 태도가 새마을운동의 추진과 새마을 교육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한국인들의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사회구조 속에 배태되어 있는 한국인의 잠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새마을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재외 한국인 사회에서도 협동과 자조, 근면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콜만, 퍼트남 등이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남달리 근면하고 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스스로 돕고 협동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협동과 근면 및 자조 정신이 새마을운동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한국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외국의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브란트(Brant 1981)는 한국인들의 협동조직은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예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한국 농촌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계, 품앗이, 두레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적 사회조직은 기본적으로 협동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조직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력한 행정력 동원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하고 행정적 강제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동의하며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에 한국 사회 전

반에 걸쳐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도력과 행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제력이 전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박대통령이 경북 청도군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는 주민 스스로 마을 안길을 확장하고 끊어진 다리를 말끔히 새로 건설한 현장을 목격했다. 박대통령은 "이 마을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가꾸고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는데 왜 다른 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주민 스스로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돌아 왔다. 그 후 그는 이 마을과 같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면 전국의 농촌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을 대상으로 한 한해대책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바 있다(대통령 비서실 1978).

박 대통령이 청도군에서 목격한 마을개발 모형은 한국 사회의 모든 마을들이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던 마을의 자치적 운영 메커니즘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농촌 마을사회는 대동계를 조직하여 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운영 경비에 충당해 왔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이 경비를 추렴하여 사용해 왔다. 마을 대동계는 마을의 공동제사를 집전하고 마을 도로, 교량, 마을회관 등과 같은 마을의 공동시설을 스스로 건설 · 관리하였으며 마을의 임금 수준과 기타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는 주민 자치조직이었다.

이 외에도 마을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상사와 자녀의 혼사를 준비하기 위해 혼 · 상계를 운영해 왔으며 벼농사에 필수적인 관개수리를 위해 수리계를 조직 · 운영하고 마을의 또래집단이나 동창, 동갑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목계, 놀이계 등을 조직 · 운영해 왔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강조하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은 한국 사회 속에 내재된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분명히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마을 운영 메커니즘을 현대적인 마을개발 모델로 개조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전국적으로 보급된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이 농촌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의 모델이었다면 주민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주민들이 아주 친숙하게 오랫동안 마을 사회에서 실천해 왔던 자신들의 일이었기에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이 뒷받침되었던 것은 사실이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 운동이 손쉽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국의 농촌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던 농촌마을의 운영 메커니즘을 현대적으로 체계화하여 주민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이론인가? 실천적 운동인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의도 그만큼 어렵다. 많은 사람이 가장 흔히 정의하는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다.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근면,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함양하여 새마을지도자와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잘살기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각양각색이다. 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도 고치고, 절미 저축운동을 하는 그런 잘살기 운동이라는 식의 대답이 주를 이룬다.

KOICA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과정에 입소하는 외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교육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1970년대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오늘날 발전된 한국의 농촌을 보며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질문하지만 이에 대답해 주는 강사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새마을운동을 자신들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에는 많은 새마을운동 연구소가 있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198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치적 오염,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확산과 함께 흔적을 감추었다.

당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자들의 논문은 대부분 새마을운동에 의해 수행된 과제들에 대한 평가, 특히 소득증대, 인프라개발 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의의, 철학적 배경 등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실체를 구명하거나 그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론적 배경 없이 시작되었다. 청도군의 한 마을사례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된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실천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이 학문적으로 뒷받침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최양부(1978)는 "Korean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its Structure, Strategy and Performance"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농촌개발 모델이라고 최초로 명명했다. 새마을운동의 구조와 전략을 구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이론화를 위한 최초의 연구로 인정된다.

황인정(1982)은 새마을운동을 한국의 농촌종합개발모델로 보고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개발 이론과 위로부터의 개발 이론을 적절하게 혼합한 농촌개발 모델이며 주민의 조직화, 의식개혁, 자발적 주민 참여, 자본동원,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정기환(1986)은 "A Model Comparison Between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nd the Rural Saemaul Undong in Korea" 라는 연구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모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 위의 두 연구가 새마을운동의 성격 구명과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데 기여한 연구라면 정기환의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구조를 모형화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 정기환은 새마을운동의 목적과 목표, 전략, 수단, 조직체계, 지도자, 집행체계, 정부의 지원 방법 등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을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외국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된 기초적인 연구 수준이다.

박진환(1997)은 "The Saemaul Movement: Korea's Approach to Rural Modernization in 1970s"라는 연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추진 배경과 의의 그리고 1970년대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유용한 소개서로 평가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박진환박사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오고 있지만 이를 이론화하거나 모형화한 연구서는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새마을운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이론화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정기환은 KOICA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추진 방법론을 개발하였다(2002, KOICA). 한편 정기환은 베트남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UNESCAP이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모델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aemaul Undong, KREI)

를 작성한 바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기환의 연구도 외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새마을운동 추진 방법론을 정리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지역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이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Ⅳ. 새마을운동의 이론화를 위한 틀

1. 새마을운동의 정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주민이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 의식 개혁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 및 공장새마을로 확산되기 이전 단계를 농촌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 전은 농촌의 마을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반면 그 후에는 도시와 직장으로 확산되고 전국의 모든 조직이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농촌새마을운동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으로 통칭되는 것은 특별한 구분이 없는 한 농촌새마을운동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의 지원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이전에는 정부 등 외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새마을운동의 특징은 주민들이 마을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재원 또는 기술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먼저 새마을운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 참여를 요청했고 주민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하는 위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top)을 택했지만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밑으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below)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2. 새마을운동의 목표

새마을운동의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속의 각 개인들이 잘살고 지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면 결국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부강한 국가 건설에 있다.

새마을운동이 다른 지역개발운동과 다른 점은 운

동의 첫째 목표가 자신과 가족들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수단이 동원된다.

가. 소득증대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득증대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주민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득증대는 지역개발의 첫 번째 덕목이 된다. 새마을운동에서 소득증대는 농업소득의 증대와 비농업 분야 소득증대로 구분된다. 비농업 분야 소득은 다시 취업 소득과 겸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나. 인프라 개발

마을의 인프라 개발은 농업소득의 증대는 물론 마을 생활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리시설의 건설, 교통 및 운반수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마을 도로 포장이나 확장,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댐의 건설이나 제방 축조, 기계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지정리 등은 모두 인프라 개발에 해당한다.

다. 생활환경개선

마을 생활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주택환경 개선, 특히 부엌과 화장실 건설, 작업 후 땀을 씻을 수 있는 간이 샤워장 건설, 나무나 꽃을 심을 화단 조성, 위생적인 식수 공급 등은 모두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수록 식량생산이 중요하게 되고 화장실이나 부엌개량, 샤워장 등은 개발 순위에서 뒤로 쳐지는 것이 보통이다.

라. 근면, 자조, 협동정신 계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로나 이러한 정신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면, 자조, 협동은 지역사회가 성립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역사회 생활을 통해서, 조직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육성된다.

마. 새마을운동의 추진 전략

1) 지역사회 단위의 개발

새마을운동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마을 단위 사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새마을운동은 마

을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시작된 지역개발운동이다. 따라서 마을 안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 가면서 공장 새마을운동, 회사 새마을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경우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라는 하나의 지역 단위를 근간으로 하기보다는 회사, 공장 등 사람들의 집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마을간 도로, 하천, 용수개발 등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했던 새마을운동은 동일 도로권, 동일 수계권, 동일 경제권 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광역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개의 마을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는 마을에서 광역화된 지역사회로 확대된다.

2) 정부 주도의 밑으로부터의 개발

새마을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방법론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밑으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below)방식과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top) 방식이 혼합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개발(bottom-up approach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on)이라는 점이다.

흔히 국제기구 등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가장 효율적인 지역개발 모델로 상정하고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강조해 왔다. 밑으로부터의 개발은 주민이 개발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화하고 개발 수단을 모색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법론이라고 평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개발을 스스로 추진할 만큼 자원과 경제적인 능력(economic affordabi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의사결정 권한(community empowerment)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고 이끌어 갈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스스로 추진해 갈 만큼 지역사회가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협동과 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규범(social norms and regulations)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와 같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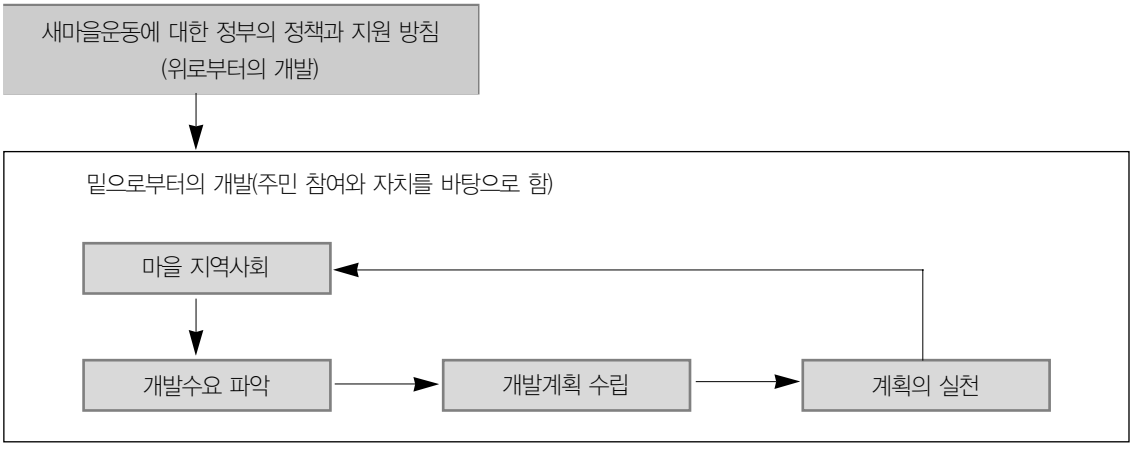
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설사 외부의 지원 하에 이러한 밑으로 부터의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외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이 사업은 곧 중단되고 만다.

위로부터의 개발은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가 개발 초기에 흔히 취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십과 주민의 개발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정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형태다. 위로부터의 개발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개발 초기에는 매우 유용한 개발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중앙 정부가 모든 일을 총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지역 나름의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 사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주민의 동기 유발과 활동을 지원하되 기초 지역사회에서의 개발사업은 전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개발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한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위로부터의 개발 방식과 밑으로부터의 개발방식을 적절히 혼용한 방식이다. 즉, 정부가 새마을운동 추진에 필요한 물자와 재원을 지원해 주되,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림 1〉 정부 주도의 밑으로부터의 개발 방식



이 과정에서 주민은 자신들의 마을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 해결 방안을 결정하며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된다.

① 주민은 문제의 발굴과 해결 방안의 도출, 의사결정,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
②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과 재정확보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금을 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③ 이와 같은 전 과정을 통하여 주민은 문제 의식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등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함양해 나가게 된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촌 마을 운영 메커니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방법론은 현대의 어느 지역개발 모델이 지니고 있는 장점보다 우월하다. 새마을운동은 사업을 실천해 가면서 개발이론을 체험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발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방법론은 국제기구 등에서 수년간 시도하고 있는 capacity build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empowerment, governance 등의 방법론이 종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마을 운동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면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에서 주민의 자체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3) 종합적 개발 방식

새마을운동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 농촌 지역 종합개발사업이다.

종합개발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방식이 있다. 수직적 통합은 마을 등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중앙 단위 사업들과 통합되어 추진되는 방식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중앙 단위 사업과 통합되지 못했을 때, 지역개발사업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마을 지역사회의 개발사업 만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공공 서비스 기능 확충, 사회 인프라 개발 등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수평적 통합은 마을 단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개발사업을 마을이라는 지역사회 단위의 한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위미한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농가, 잘사는 마을을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농촌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인프라 개발, 지역사회 정비, 사회문화 증진, 보건위생 향상 등을 도모하는 종합적 지역개발운동이라고 정의 된다.

■ 소득증대사업
- 농업 부문 소득개발 사업
- 비농업 부문 소득개발 사업

■ 인프라 개발사업
- 농업생산 기반 정비 등 물리적 인프라 개발 사업
- 도로, 교량 등 사회적 인프라 개발 사업
- 취락구조, 주택 등 개선 사업

■ 지역사회 정비 사업
- 마을회관 건립
- 마을 공원 조성 등 마을 경관 및 환경 정비

■ 사회문화 증진 사업
- 지역사회 조직 정비, 활성화등 기초적 자치능력 배양
-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 및 축제 활성화
- 청소년층의 문화, 스포츠 활동 지원

■ 주거환경 및 보건 위생 향상 사업
- 부엌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 시설 개선
-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하수도 개선

4) 새마을정신 계발 운동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는 운동이 아니다. 본원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협동과 자조적 정신으로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물리적 성과보다도 주민이 "우리도 할 수 있다(can do spirits)"는 정신을 함양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관리하는 능력과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마을정신은 정부가 지시하는 것을 주민이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함양될 수 없다. 주민 스스로 리더십을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적인 해결 방식을 개발하는 협동적이고도 자조적인 사회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여적 개발과 지역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주민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민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주며 이들이 마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 · 훈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우수한 마을을 전략적으로 지원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잘하는 마을을 더 지원해 주는 소위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잘하는 마을이나 못하는 마을을 정부가 똑같이 지원한다면 누가 더 잘하려는 생각을 할 것인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잘하는 마을을 포상하거나 더 지원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성과가 낮은 마을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여 잘하는 마을을 벤치마킹하도록 하는데 있다.

6) 앞서 가는 지도자로부터 배우는 전략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전략은 잘하는 마을, 앞서 가는 지도자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훈련 과정에서 강사는 유능한 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성공한 마을의 지도자로 구성하였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농민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신뢰도 쌓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의 강의를 장관이나 대학 교수가 듣고 배우도록 하고 같은 방식으로 농촌지도자는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배우는 방식을 통해서 마을 주민과 정부의 고위 관료, 지식인, 회사 사장과 고용인 들이 상호 학습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Ⅴ. 새마을운동의 베트남 적용 사례

1. 사업의 개요

가.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1 – 2002(2개년)

■ 사업비 : KOICA가 지원하는 무상원조
300천 달러

■ 사업 지역 : 2개지역 7개 마을
– Thai Nguyen성 Dai Tu군 Khioi Ky면내 6개마을
– Quang Tri성 Vin Linh군 Vinh Thanh면 Hien Lung마을

■ 사업 목표 : 지역 주민의 농업생산량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원 내역
– 전문가 1인 파견 : 2년간 4개월씩 2회 파견
– 연수생 초청 : 24인 초청하여 새마을운동 교육 실시
– 새마을운동 활동 지원 :
소규모 댐, 관개수로개설, 도로 개량, 마을회관, 주택개량, 생산활동 지원 등
– 기자재 지원 : 마을회관 집기 등
– 봉사단원 파견 : 2인

■ 사업 실시 기관

– 사업 주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사업 자문 :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총괄책임기관 :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시행기관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국립농촌계획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나. 기대 효과

■ 사업대상 지구의 관개시설, 도로 개보수 등을 통한 농업 여건과 인프라 개선

■ 농업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의 자조정신 함양

2. 사업 추진 절차

가. 사업 대상 지구 선정

나. 대상 지구 실태 및 개발 수요 조사

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점과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수립

■ 베트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조사 연구팀 구성

■ 새마을운동 방법론 교육 및 부문별 계획 수립 방법 교육

■ 분야별로 NIAPP의 전문가와 마을 지도자가 마을의 실태와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마. 분야별 계획의 통합 조정

■ 개발계획의 목표와 전략, 시기 등 협의 조정

■ KOICA 지원에 대응한 정부 및 주민의 투자계획 검토

바. 개발계획에 대한 베트남의 해당 성 및 현정부의 승인 및 사업 실시

3. 사업 추진 실적

4. 예산 투입 : 코이키(KhoiKy) 지역의 사업 계획과 실적 ※ 표1, 3 참고

가. KOICA 지원

■ KOICA는 이 사업에 30만 달러 지원

나. 베트남 측 부담

1) 베트남 측 부담

– 베트남 측은 180천 달러를 투입

– 특히 빈찬 지역의 총 투자액 가운데 KOICA가 47.3%, 지방정부가 32.4%, 주민이 20.3%를 부담 ※ 표 2 참고

〈표 1〉 코이키(Khoi Ky) 지역의 사업 계획과 실적

	계 획 (A)	실 적 (B)	A / B (%)	비 고
마을회관건립2동	2동(230m²)	2동(270m²)	100.0(117.0)	
관개수로	2983m	4009m		
소규모 댐건설	35m	-	100.0	사업변경
도로포장	3.0km	500m	16.7	산배정지연
주택개량(가구)				
부엌개량	404	318	78.7	
화장실건축	150	152	101.3	
샤워장건축	115	153	133.0	
우물 개량	243	185	76.1	
교육시설지원				
컴퓨터	2대	2대	100.0	
앰프	1조	1조	100.0	
유아원 장난감	1조	1조	100.0	
보건사업지원				
구급약	6조	6조	100.0	
자전거	6대	6대	100.0	
기타 자재				
기타	12대	12대	100.0	
스포츠 기구	1조	1조	100.0	
마을회관 비품	1조	1조	100.0	
농업신용	US$ 10,000	US$ 10,000	100.0	

〈표 2〉 사업지구(마을)에 직접 투입된 예산액(2002. 12)

	계획(US$)				실적(US$)			
	KOICA	베정부	주민	계	KOICA	베정부	주민	계
코이키	74,249	55,441	58,810	188,500	74,695	36,753	51,648	163,096
	(39.4)	(29.4)	(31.2)	(100.0)	(45.8)	(22.5)	(310.7)	(100.0)
빈 찬	59,188	28,553	30,819	118,560	59,796	40,732	49,842	150,370
	(49.9)	(24.1)	(26.0)	(100.0)	(39.8)	(27.1)	(33.1)	(100.0)
계	133,437	83,994	89,629	307,060	134,491	77,485	101,490	313,466
	(43.5)	(27.4)	(29.2)	(100.0)	(42.9)	(24.7)	(32.4)	(100.0)

〈표 3〉 빈찬(Vinh Tran) 지역의 사업 계획과 실적

	계 획 (A)	실 적 (B)	A / B (%)	비 고
마을회관건립2동	1동(160m²)	1동(242m²)	100.0(152.5)	
유아원	-	1동		
관개수로	2,983m	2,983m	100.0	사업변경
도로포장	1.52km	2.20km	144.7	산배정지연
주택개량(가구)				
부엌개량	143	134	93.7	
화장실건축	126	128	101.6	
샤워장건축	127	126	99.2	
교육시설지원				
컴퓨터	2대	2대	100.0	
앰프	1조	1조	100.0	
유아원 장난감	1조	1조	100.0	
학교 교육자재	1조	1조	100.0	
보건사업지원				
구급약	1조	1조	100.0	
자전거	1대	1대	100.0	
기타 자재				
기타	2대	2대	100.0	
스포츠 기구	1조	1조	100.0	
마을회관 비품	1조	1조	100.0	
농업신용	US$ 14,000	US$ 14,000	100.0	

5. 사업 성과 평가

가. 직접적인 효과

1) 코이키(Khoiky) 지역

■ 4,009m의 2차 관개수로 개량을 통하여 48ha의 논과 10ha의 차밭에 관개를 개선하여 만성적인 가뭄을 해소하였고 3기작인 겨울철 옥수수를 20ha 재배하게 되었다. 이 결과 2000년도 쌀은 ha당 4톤에서 2004년도에는 5.13톤으로 증가되어 12.8%의 증산 효과가 있었고 쌀과 옥수수 및 잡곡 등 총 50 톤의 식량이 증산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신용사업은 2002년부터 VND153,000,000를 기금으로 하여 2년간 연리 7.0%의 이자율로 운영하였다[1]. 2001~2004년간 245농가가 융자의 혜택을 받았고 125호가 축산에, 120호

1) 베트남 은행의 대출 이자는 월 0.98% ~ 1.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시범사업지구에서 부과하는 연이율 7%는 농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월이자율 0.5%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이자율이다.

는 농작물 생산에 사용하였다. 2004년 12월 결산시 농업신용 기금 총액은 VND164,800,000로 원금의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지구에 318호가 굴뚝을 설치한 부엌을 개량하였고 152호가 화장실을, 153호가 샤워장을 신설하였다.

■ 마을간 도로 560m를 폭 3m, 깊이 18cm로 시멘트 포장하여 수송조건을 개량하였다.

■ 2개 지역에 135m^2 규모의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여 회의시설을 확보하고 유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컴퓨터 2대, 키타 12대, 스포츠 기구 및 앰프, 스피커, 의자 등 마을회관 비품, 간호봉사자를 위한 자전거 1대와 구급약 1조를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 교육적, 보건위생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2) 빈찬(Vihn Tran) 지역

■ 2,983m의 관개수로를 개선하여 50ha의 논에 관개를 개선하여 쌀을 ha당 4.5톤에서 5.6톤으로 24.4% 증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연간 생산량이 450kg에서 530kg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2,200m의 마을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매년 홍수에 의해 파괴되는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고 통행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농업신용사업이 새우 양식장에 집중 투입되어 새우 양식 면적은 2002년도에 4ha에서 2004년도에는 23ha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 새우 양식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60호로서, 사료비를 제외한 ha당 연간 조수입은 VND 6,2000,000(약US$4,133)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소득액은 2002년도에 VND3,000,000에서 2004년도에는 VND 4,900,000 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 증가는 농업 소득 이외에 강변의 모래와 자갈 채취에 의한 소득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2년부터 VND210,000,000의 농업신용기금을 135농가가 연리 6.0%의 이자율로 활용하였다. 농업신용기금의 이용은 주로 새우 양식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자는 매월 26일 상환하고 이자가 상환되면 이를 적립하여 27일에 다른 농가에게 대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자 수입금 중 40%는 기금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며 60%는 적립하여 원금에 합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농업신용 기금은 2004년도에 VND231,000,000으로 2002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 242m² 규모의 2층 마을회관 겸 학교를 건축하여 마을 주민의 집회장과 사무실, 현대식 초등학교 교실 2개와 현대화된 학습용 비품 구비, 마을 보건요원 사무소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놀이터, 앰프와 스피커, 텔레비전, 책상과 의자, 사무집기 등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 134동의 부엌을 개량하였고 128동의 화장실과 126동의 샤워장을 신설하였다.

■ 컴퓨터 2대, 키타 2대, 스포츠 기구 및 앰프, 스피커, 의자 등 마을회관 비품, 간호봉사자를 위한 자전거 1대와 구급약 1조를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 교육적, 보건위생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나. 확산 효과

■ 타이웬성 코이키에서는 면내 여러 마을에서 자력으로 800호가 부엌을 개량하였고 1200호가 샤워장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500호가 화장실을 개설하였다.

■ 광지성에서는 현릉마을을 모델로 한 새마을운동을 성 전체로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KOICA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베트남 농업 · 농촌개발부(MARD)는 2001-2002 기간 중에 실시된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5개년간 6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식 새마을운동(Lang Moi)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Ⅵ.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한 협력단의 역할

1.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위기

2000년 9월 UN은 밀레니엄 개발 선언을 통해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제시했다. 빈곤과 기아의 해소는 UN이 제시한 8개의 개발 목표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UN은 2015년까지 10억명에 달하는 1인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대단히 야심찬 개발 목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2004년, 라오스의 브얀티안 부시장 Dr. Sillabong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즉각 브얀티안시 경제투자국장에게 브얀티안시 경제개발10개년 계획에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적용한 브얀티안시 빈곤해소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새마을운동 방법론이 라오스가 당면하고 있

는 빈곤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중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신농촌개발운동이나 신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농촌빈곤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농촌개발을 위해서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은 많은 공무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를 희망한다. 2006-07년 동안 많은 중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에는 새마을운동 현장이 사라진지 오래고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가 개도국이 요청하는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려 해도 자격을 갖춰 파견할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농촌개발 모델로 부상했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존립위기에 처한 것이다.

가. 위기의 대내적인 요인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농촌개발 모델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본래 지역개발을 위한 방법론과 정신에서 벗어난 봉사활동 중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새마을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각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 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한편,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새마을운동을 실패한 국민운동으로 정의하고, 이미 1980년대에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나 국내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중단되고 그 현장마저도 보여 줄 곳을 찾아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1960-70년대의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농업 생산기반과 농촌이 잘 정비된 선진국 일본은 왜 중앙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실시했던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무라쭈꾸리운동[2]을 전개하고 있는가?

2) 일본의 무라쭈꾸리운동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을가꾸기운동이다. 무라쭈꾸리 운동은 일본의 중앙정부가 1992년에 도입한 마을가꾸기운동으로 매 10년마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모든 시정촌과 마을이 참여하여 실천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식과 내용면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아주 유사하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 실정에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그 사업 내용을 달리하며 계속될 수 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인프라개발이나 생활환경개선에 치중했다면 200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 가꾸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은 통시대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개발운동이다.

그러나 아무리 새마을운동이 우수한 농촌개발 모델이라고 해도 그 현장이사라진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식량문제와 기초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한 중진국들이 일본의 1사1촌 운동이나 무라쭈구리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 위기의 대외적인 요인

농촌 빈곤해소와 농촌개발 문제는 전 지구적인 과제인 만큼 농촌빈곤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모델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건설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수요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 특히 농촌 빈곤 해소 모델로서 농촌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서 멈춘 상태에 있다. 한국이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참여적 농촌개발, 임파워먼트, 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과 농촌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개발 관리능력 계발 등을 활용하여 21세기형 농촌개발과 지역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신농촌건설사업, 베트남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농촌빈곤 해소 모델로서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그 위상을 상실하고 중국의 신농촌건설사업이나 베트남의 새농촌개발이 농촌 빈곤퇴치와 농촌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모델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고유 모델로서의 새마을운동이 UN 등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을 갖는 농촌개발의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마치 수조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고 타사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협력단의 역할

가. UN의 MDGs 달성 수단으로 새마을운동 방법론 활용

농촌지역의 빈곤과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구적인 과제인 동시에 UN과 그 회원국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과 전략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새마을운동은 농촌 빈곤과 기아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KOICA는 UN을 통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입각한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KOICA가 제공하는 무상원조 사업에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농촌개발 모델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모델 개발

새마을운동 현장도 없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할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전문가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대개도국 전파를 확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여 새마을운동을 KOICA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협력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외국의 새마을운동 수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KOICA는 농촌빈곤 해소와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이론화 및 추진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할 이론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사업, 경상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등을 21세기형 새마을운동으로 체계화하고 해당도와 협력하여 새마을운동의 현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때, 통일된 이론틀과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KOICA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KOICA가 지원하는 새마을운동은 파견된 전문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을 갖고 전달된다. 심한 경우, 수도작 재배에 의한 소득증대도 새마을운동이고, Cow Bank 사업도 새마을운동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새마을운동 방법론 속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제들이다. 새마을운동은 방법론이다. 새마을운동에 담을 수 있는 과제는 시대에 따라서 장소와 국가에 따라서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절절치 못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그 안에 담는 사업도 적절히 수행되기 어렵다.

다.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추진 방법 개선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훈련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원국이 새마을운동을 도입 실천하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은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발생한 배경과 이론적 틀, 새마을운동을 수원국에서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론, 계획 수립 방법, 실행 방법, 평가 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관리와 사업 관리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이 훈련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 목적에 알맞은 교과목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협대학이 주관하면 새마을동의 주 내용은 협동조합운동이 되고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면 농촌지도방법론과 농업개발사업이 되기 쉽다. 이 경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혼란스러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이론적 체계도 갖추지 못한, 행정력 동원에 의한 강제적인 운동이라고 잘못 전달되기 쉽다. KOICA가 파견하는 새마을운동 전문가도 통일된 이론과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개발도상국가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방법론에 담는 사업 내용은 각국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계획 수립을 자문하고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활동할 국제적 수준의 새마을운동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 전문가 육성을 KOICA가 담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운동 전문가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 및 새마을운동 컨설팅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독립된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기 보다는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제도를 개선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방법을 개선한다면 후계 새마을운동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1982,「개발연대의 경제정책」

내무부, 1980,「새마을운동 10년사」

내무부, 1983,「새마을운동」

농림부, 1972,「새마을로 가는 길:박대통령과 농어촌근대화」

농어촌진흥공사, 1995,「농어촌진흥공사 25년사」

대통령비서실, 1978,「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

브란트, 빈센트, SR., 1975,「한국의 촌락」, 김관봉 역, 시사문제연구소,

브란트, 빈센트, SR., 1981,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와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소 편,

이질현, 로젠, 1981, "새마을운동의 방향",「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이해 준, 1990, "조선후기 동약?향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조산후기 향약 연구」, 대우학술총서, 향촌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정기환, 문순철, 1999,「농촌인구과소화지역의 유형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도현, 1989, "국가권력의 농민통제와 동원정책: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I」,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편,

황인정, 1983, "198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과제와 발전 방향", 농촌경제

Bernard, Jessie. 1982.「The Sociology of Community」, 안태환(역), 박영사

Choe Yang-Boo, 1978,「The Korean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Its Structure, Strategy and Performan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Chung K. W. 1986, "A Model Comparison between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nd the Rural Saemaul Undong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IX. No. 2, Dec.,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Chung K. W. and Oh N, W., 1994, "Rural Pov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Rural Poverty in Developing Asia?, Ed. Quibria, Asia Development Bank. Manila

Chung K. W. 2000, "A Pilot Study on the Rural Saemaul Undong in Vietnam: An Introduction to the Vietnamese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KOICA (Unpublished)

Chung K. W. 2006, "Guidelines for Saemaul Undong: Prepared for UNESCAP project on Replication of Best Practice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Cambodia, Lao PDR and Nep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Unpublished)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Coleman, Jame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oleman, James, 1993, The Rational Reconstruction of Society, Sociological Review, 84: 1460–74

Doglass, M, The Korean Saemaul Undong: Accelerated Rural Development in an Open Economy, Rural Development and the State: Contradictions and Dilemas in Developing Countries」, Lea and Chaudhri (eds.), London.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Hahn, Sung–Joe K. S., 1980, "Political Philosophy of the Saemaul Movement", 「Toward a New Community Life」, Lee Man–Gap Ed.,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in–Hwan, 1997, 「The Saemaul Movement: Korean' s Approach to rural Modernization in the 1970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22, Seoul

Poplin, D. 1972.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Putnam, robert, 1993a, 「Making Democracy: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SoJin Kwang, 2005, The Final Evaluation Report for the Replication of Best practice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Cambodia and Lao PDR, KOICA (Unpublished)

Uphoff, Norman, 1993,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NGO in Rural Development: Opportunities with Diminishing States and Expanding Markets", World Dvelopment 21(4): 607–622

Uphoff, Norma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World Bank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Ⅱ. KOICA 업데이트

1. 신장범 KOICA 총재와 ODA WATCH 단원과의 간담회

2. 지구촌대학생연합 워크샵 "8가지 약속, 함께하는 MDG"
KOICA 인사 기조강연

3. KOICA 전문가 등록 풀 구축현황

지구촌대학생연합 워크샵 "8가지 약속, 함께하는 MDG"

MDG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추진방안※

Ⅰ. 대내외 ODA 환경의 변화

1. MDG 선언을 통한 빈곤 완화 달성노력 가속화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공여국들은 빈곤완화 등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00년 UN총회에서 "천년개발목표(MDG)" 를 선언

■ 개별국가들은 MDG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여 부처별 예산배정과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서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음

2. ODA규모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중

■ 전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ODA 재원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이 ODA 논의의 핵심과제로 등장

■ 2005년 9월, 제60차 UN 정상회의에서 MDG를 포함한 국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별 전략 채택 및 실행 결의

3. MDG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 우리 정부는 대외원조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5년도에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분권화 된 원조체

※ 본고는 2007. 6. 25 지구촌 대학생 캠프에서 KOICA 장현식 실장이 기조강연으로 강의한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임.

계 보완 및 부처간 협의기능 강화 노력

■ ODA 규모 확대 노력 및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수원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맞춤형 원조를 위한 국가 원조전략(CP : Country Programing) 수립 추진

Ⅱ. 한국 ODA 개괄

1. 연도별 공여 실적

■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이

-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결과, 1995년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06년도에는 4.46억 달러를 기록,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나타냄
- 무상원조의 경우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0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 표1 참조

2. 중점 추진방향

■ 개도국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가 가능한 사업 지원 및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 집중지원

■ MDG 등 국제사회 공동목표 지원강화

■ 국제적 재난복구 및 재건지원 강화

■ 우리나라 위상제고 및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표 1〉 최근 6년간의 공여 실적

구분	'01	'02	'03	'04	'05	'06
ODA총계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446.67
양자간 원조	171.54	206.76	245.17	330.76	463.30	365.61
- 무상원조	52.97	66.70	145.46	212.09	318.00	248.50
- 유상원조(EDCF)	118.57	140.06	99.71	118.68	145.30	117.11
다자간 원조	93.11	72.02	120.74	92.56	289.01	81.06
ODA/GNI비율(%)	0.06	0.06	0.06	0.06	0.10	0.05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비율(%)	30.90	32.30	59.30	64.10	68.60	68.00

Ⅲ. 대외무상원조 집행전략

〈표 2〉 KOICA의 7대 사업 분야

분야	MDG 기여	내용 및 사례
교육훈련	Goal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Goal 8/Target 16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 기초교육 확대, 직업훈련강화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인적 자원개발경험 활용 *스리랑카 Zahira College 초등학교 신축사업('05-' 06/800천불)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2-' 05/2,000천불)
보건의료	Goal 4(아동사망률 감소) Goal 5(모성보건 증진)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보건의료 혜택 확대, 기초위생수준 향상 - 서남아 및 아프리카 최빈국 지원 강화 *몽골 식수개발사업('05~' 06/500천불)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현대화사업 ('05-' 06/2,400천불)
행정제도	Goal 8/Target 12 (무역 및 금융시스템 발전, Good Governence)	- 개도국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사업 ('04-' 05/870천불)
정보통신	Goal 8/Target 18 (정보통신관련 신기술의 혜택 이용 가능)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 주요 정부부처 정보화 위주 지원 *엘살바도르 소비자보호청 IT시스템 구축 사업('05-' 06/500천불) *한-베트남 친선 IT대학 설립사업 ('04-' 07/10,000천불)
산업 에너지	Goal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Goal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Goal 4(아동사망률 감소) Goal 5(모성보건 증진)	- 사업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지원 *아세안 5개국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04-' 07/1,200천불)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건설사업 ('05-' 06/1,600천불)
농촌개발	Goal 1/Target 1(절대빈곤 인구 반감) Goal 1/target 2(기아인구비율 반감) Goal 7/Target 11(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여건 개선)	- 농업생산성 증진, 농업인프라 확대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05-' 06/2,300천불) *ESCAP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02-' 05/615.8천불)
환경 및 기타	Goal 7/Target 9(지속가능개발원칙) Goal 7/Target 10(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환경)	- 자연자원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보 존 등 *중국 북경지구 산림종합경영 시범사업('05-' 07/1,000천불)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04-' 05/300천불)

〈표 3〉 연수사업 실적 (1991~2006)〉

구분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기타
과정	143과정	92과정	576과정	181과정	145과정	201과정	144과정
인원	2,540명	1,520명	9,867명	3,041명	2,360명	3,079명	2,320명
비중(%)	10.3	6.1	39.9	12.3	9.5	12.5	9.4

1. KOICA의 사업분야

■ 7개 중점분야 중심의 지원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7개 분야 지원

※ 표2. 참조

2. KOICA의 사업수단

■ 국내초청 연수사업

– 개도국의 인력자원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한국에 초청

– 1991~2006년까지 총 1,482과정 개설, 24,727명이 참가

※ 표3. 참조

■ 프로그램 원조

– 인프라 건축,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협력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며 수원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

– 2006년도에 재난구호를 포함, 총 603억원 규모 집행

■ 개발조사

–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및 설계 및 EDCF와 연계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기회 제공

– 1991~2006년도 까지 총 474억원 지원

■ 해외봉사단 파견

– KOICA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협력사업으로 교육문화 분야(26개종–한국어, 유아교육, 시장마케팅 등)와 농림수산 분야(15개종–과수재배, 농촌개발, 수의사 등), 보건위생(9개종–간호, 물리치료, 약사 등), 기타(기계, 자동차정비, 태권도)의 분야에서 활동

– 1990~2006년도 까지 총 3,776명을 41개국에 파견

■ 전문인력 파견

–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하거나, 개도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개도국 현장에 파견

– 전문인력은 기술이전 및 정책자문 형태의 일반 전문가와 의료단, 태권도 사범 파견의 3가지 형태로 구분

– 2006년도에 전문가는 19개국 57명, 의료단은 16개국 16명, 태권도 사범은 19 개국 19명 파견

■ NGO지원

– 국민 참여형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부차원 협력사업의 보완 및 원조의 시너지 효

과 제고

- 1995년도에 지원액이 4.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도에 52원으로 증액되어 199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됨
- 1995~2006도 까지 총 46국 55개 단체 345건의 사업 지원

■ 재난복구

- 재해 또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에게 의료인력 파견, 긴급구호물품 등의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인도적 긴급구호와 난민들의 정착 조성을 위한 장기복구 원조인 장기적재건활동으로 구분
- 2004년도 남아시아 쓰나미 및 2005년도 파키스탄 대지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긴급구호활동 시작

Ⅳ.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

1. ODA 규모의 증액과 질적 개선

■ ODA 규모 확대

- 절대적인 원조규모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2006년도 ODA/GNI 비율은 0.05%로 OECD/DAC 회원국 평균 0.30%의 1/6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GNI 기준(GNI는 7,646억 달러) 세계 11위 라는 경제대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조 규모는 GNI의 0.05%, 1인당 ODA는 10달러 수준에 그쳐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와 경쟁구도에 있는 일본과 비교시에도 우리의 경제력은 일본의 1/2 수준이나 원조규모는 1/5 정도에 불과함
- 현재 한국 정부는 ODA/GNI 비율을 2009년까지 0.1%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DAC 가입 이후 빠른 기간(3~4년)내에 DAC회원국의 ODA/GNI 평균(2002년 0.23%)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ODA 규모 확대 계획임

■ 무상원조 비율 증대

- OECD는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상원조 축소 및 최빈국에 대한 무상 중심의 원조를 권고하였으며, 국제사회 또한 무상원조 중심의 ODA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ODA 중 무상원조 부분은 KOICA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아프간과 이라크 재건 지원 이후에는 무상원조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 ODA중 68%를(2006년 기준) 기록한 바 있으나, 이는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이 99%라는 세계적 원조 추세 및 ODA 근본 취지, 사업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ODA 무상원조사업 실시부처 일원화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대외무상원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협력단 설립취지와는 달리 개별적 입법 또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입법 사례

•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부처별 주요 무상원조사업 추진내역

• 정보통신부 : IT봉사단(연간 300여명), IT연수생초청(연간 2~3백여명)개도국 IT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 과학기술부 : 연간 50여명 수준의 과학기술자 교류

• 보건복지부 : 한방의료학 교류, 보건의료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국인 유학생초청 등(연간 약 60여명)

– 여러 부처의 중복 실시로 인한 원조의 효율성 및 일관성 초래, 따라서 이를 KOICA로 일원화하여 무상원조의 통합실시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2. MDG 실천 위한 원조기본지침 수립

■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

– 우리나라 원조 사업의 이념, 목표, 중·장기 원조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원조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일관성 확보

– MDG 달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기본목표와 전략 등을 포함하는 원조 전략틀(Strategic Framework) 수립, 반영

3. 사업평가 시스템 강화

■ 평가제도의 선진화와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도모

–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중간, 종료평가 실시

– 국별, 분야별, 이슈별 평가 및 우수 사례 피드백 강화

■ 평가의 신뢰성 확보

– 평가수행 시 NGO 등 민간참여 강화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평가결과 활용 시스템 구축

– 평과결과를 우량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피드백

–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한 평가결과의 정보화 및 체계화

4. 국민 참여형 원조기반의 구축

■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 국민 개개인은 물론 민간기업, NGO, 대학 등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효과적인 ODA 사업수행 도모

■ NGO 참여강화

- 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장려
- 정책대화 등을 통한 GO와 NGO간의 Network 강화

5.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 발전

■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원조정책 및 원조기법 연구

-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화가 된 우리만의 특화성을 지닌 원조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빈곤 퇴치국(Poverty Cutter)으로서의 국제적 명성 획득
- OECD 공여국 중 유일하게 빈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생력 육성에 중점

KOICA 전문인력 풀 등록제도 소개

1. 전문인력파견 개요

■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인 빈곤은 원조자금의 증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자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 '개발도상국의 인적 역량개발' 에 중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문인력 파견은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분야별 인재양성과 정부관료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

– KOICA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개도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개발경험을 현장기술지도, 세미나,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현지 관계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상대국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제시 및 관련 인적자원개발에 기여중

■ 전문인력은 활동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첫째, 개도국이 희망하는 분야에 일정기간 동안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

- 우리나라는 1967년 에티오피아에 도시계획 분야 전문인력을 최초로 파견하였고, KOICA가 설립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여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음
- 현재까지 분야별 장 · 단기 전문가로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총 인원은 800여명을 넘는 수준

– 둘째, 이러한 전문인력 단독 파견 이외에도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 협의 및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 전문인력의 파견분야는 협력대상국으로부터 수요가 많고 파견성과가 높은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파견하되, 최근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 파견하고 있음

■ 전문인력 파견은 개도국내 관련분야의 많은 인사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단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개도국 정부들로부터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원조규모가 우리의 높은 경제적 수준에 부응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주시할 때, 국내 전문인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인력 파견은 해외봉사단 파견과 함께 대외무상원조사업에 우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따라서 KOICA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풀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유관기관의 전 · 현직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전문인력 풀 등록제도는 2002년 최초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몇 차례의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2006년 KOICA 사업방식의 전환과 내부 원조통합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2007년 6월 새단장을 하였음

2. 전문인력 풀 등록제도 소개

가.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파견예정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며, 파견 대상국에서 요구되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단,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을 경력으로 인정)

나. 파견내역

■ 활동기간 : 활동내용에 따라 상이
(예 : 1개월~2년)

■ 대 우 : 직접인건비, 체재비, 기술료, 재해보상보험가입 등 파견 제반경비

다. 등록분야

등록분야	등록 세부 분야
교 육	교육일반(기초, 초등, 중등, 고등 이상), 교육정책, 교육행정, 교 육시설 및 특별연수, 교사훈련,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교육 연구, 직업훈련, 교육시설 건축 등
농촌개발	농업정책, 농업개발, 농지개발, 농업용수자원, 농업 기계화, 시설재배, 밭작물 재배, 관개영농, 버섯재배, 화훼재배, 채소재배, 잠업, 축산, 농업지도, 농업교육, 농업연구,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수확후 관리시설, 병충해 방제, 농업 금융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축산 및 수의, 임업정책, 임업개발,?연료용 목재, 임업 교육, 임업 연구, 임산물 가공, 임산물 유통, 어업정책, 어업개발, 어업교육, 어업연구,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등
보건의료	병원건축, 보건정책, 보건교육, 전염병관리, HIV/AIDS, 예방의학, 병원관리, 생식보건, 재활, 임상병리, 전염병 검사기술, 응급의학, 간호학, 의약품, 의료기기(의공학, 의료기자재 등), 영양, 지표수(상수도) 관리, 지하수 관리, 식수개발 등
산업 에너지	에너지 정책, 전력생산(재생불능 자원 사용), 전력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 전력 송전 · 배전, 가스 공급, 발전소(유류화력, 가스화력, 석탄화력,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 에너지. 풍력. 조력 등), 생물자원 에너지, 전력 IT, 에너지 교육 · 훈련, 에너지연구, 운송정책, 도로운송, 철도운송, 철도 차량 · 기자재, 철도 신호 · 시스템, 철도운영, 수로운송, 항만 관리시스템, 선박안전, 항공운송, 공항운영 시스템, 비행기 유지장비, 창고,?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공업정책, 공업개발, 철강산업, 섬유, 화공, 비료공장, 시멘트 · 인조대리석 · 소석회, 에너지 가공, 비철금속 산업, 엔지니어링(기계공업), 수송기계 산업, 기술연구 개발, 광물 · 광업정책, 광물탐사, 석탄, 석유 및 가스, 건설, 관광, 측량, 지적, GIS 시스템, 도시 개발, 주택개발 등
정보통신	전자정부 정책수립(컨설팅), 행정정보화, 의료정보화, 도서관정보화, 우편정보화, 통합데이터센터(IDC), IT 교육(교과과정 & 교육센터운영자문), e-Learning(LMS, LCMS 등), e-Commerce, 그룹웨어, 문서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MIS), 지식관리시스템(KMS), 네트워크, 통신망설계, VoIP, 데이터베이스 등
행정제도	경제일반, 중소기업육성, 금융 및 재무관리, 시장경제, 무역진흥, 경영, 증권, 회계, 조세, 공공행정,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치안, 범죄예방, 마약관리, 인권교육 등
환경 및 기타	환경정책, 환경관리(폐기물 관리, 대기질(황사 등), 화학물질, 하수처리), 홍수방지, 환경교육, 생태환경(생태보호, 생태관광, 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 자연문화유산 보호, 여성복지, 여성개발 등

라. 등록안내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 홈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HOT LINK'의 ' 전
문인력풀 등록 ' 클릭

■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FAQ 및 문의처는 홈페
이지(www.koica.go.kr) 참조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내동향

ㅇ 대외원조기본법 국회 공청회
- ■ 김부겸의원 발의 대외원조기본법안 관련 진술서
  김은미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요지
  김혜경 / 경실련 국제위원장

ㅇ ODA 관련 회의 일정

2. 국제동향

⑴ 국제기구
- ㅇ 제 45차 OECD/DAC HLM 결과
- ㅇ OECD 개발글로벌 포럼 결과
- ㅇ OECD/DAC 최근 동향 : Environet 회의 결과
- ㅇ OECD/DAC 덴마크 동료검토 회의 결과
- ㅇ OECD 2006년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
- ㅇ OECD 제 58차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 ㅇ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 : IFFIm, UNITAID

⑵ 수원국 원조동향
- ㅇ 라오스 원조동향
- ㅇ 파키스탄 개발포럼

김부겸의원 발의 대외원조기본법안 관련 진술서

김 은 미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전체법안

■ OECD DAC 가입을 앞두고 매우 시의 적절한 법안 상정이다.

■ 하지만 명목상의 법률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개발원조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선진공여국은 ODA 정책집행에 있어 통합관리체계를 갖추고 일원화되어 전략적인 원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외교의 한 부분으로 국제개발원조를 인식하고 있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외교부의 전략수립 → 하위기관의 집행 및 평가' 의 전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영국과 네덜란드는 국제개발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부처를 설립하여 부처 내 '전략 → 집행 → 평가 →전략' 에 이르는 환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 외무성 산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가진 일본은 2008년까지 외무성과 JICA중심의 통합계획을 발표했다.

■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안 역시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외교정책을 반영하여 검토 · 수립되어야 한다.

2. 법안명과 제1조 (목적)

■ 대외원조' 는 원조 공여 시 수원국의 이익을 반영하여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공여국 중심의 용어이고 이는 국제적 노

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발협력' 으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

3. 제2조 (기본이념)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추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인도주의와 호혜주의는 ODA 공여 초기의 이념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이상을 담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부름에 응하는 수동적인 개념을 내포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실제 한국의 ODA는 2000년대 이후 외교정책의 일부로서 공여국인 한국과 수원국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이념 역시 "인도주의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사회의 법률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고려하여"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제3조 (정의)

-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와 더불어 OECD DAC 기준에 맞는 '긴급구호자금 (emergency aid)' 와 ' 기술협력 (technical assistance)' 대한 논의도 구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5. 제6조 (대외원조의 책임기관 등)

- 원조유형별로 특히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기관을 나누어 지정하는 것은,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원조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적 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선진공여국일수록 정부부처급 기관으로 일원화된 ODA 운영체계를 보인다. (영국의 DFID, 네델란드의 외부무 내 개발장관 체제 등)

- 일본의 경우 현재 분리되어 있는 유 · 무상 원조체계를 2006. 8. 10 이후부터 JICA 중심으로 유 · 무상 원조를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동 법안은 정책의 일관성과 프로그램 중복, 조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이원화된 체계를 법률로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있고 이는 국제적 논의를 역행한다는 위험이 있다.

6. 제7조 (대외원조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의 대외원조정책위원회의 명칭은 법안명과 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개발협력위원회' 로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

- 15인의 위원 구성을 20-25명으로 확대하여 정부 외부 전문가들이 50%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수원국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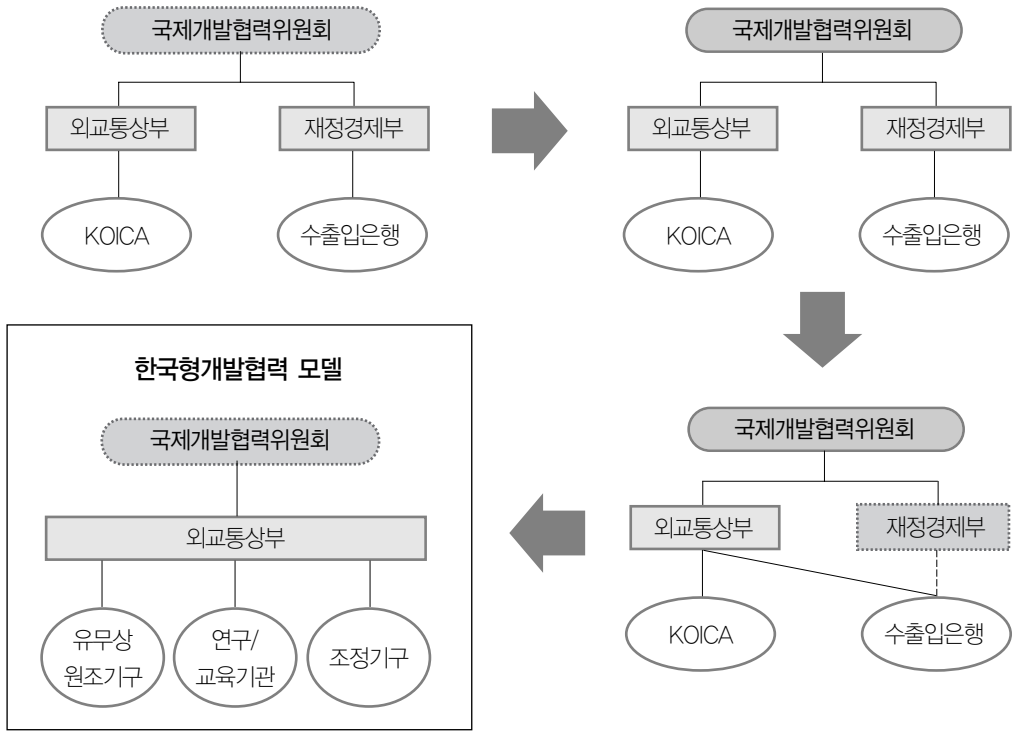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ODA 원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원회'의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06년 1월 26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가 발족되고 16개 부처장관, 2개 정부기관장과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정책의결기구로 설립되었으나, 1차 회의 이후 활동 기록이 전무한 상황이다.

■ 부처 간 조정이 힘들었던 원인은 부처 간 실무협의 채널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유·무상 원조가 이원화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조정"과 "전략수립"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은 '위원회'는 이원화된 체계를 오히려 강화하고, 그 스스로는 유명무실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정례화, 권한 및 위상의 구체적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다음의 과정을 목표로 상정해 볼 수 있다.



7. 제10조 (대외원조에 대한 평가)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선진 ODA 집행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독립적인 평가기관 또는 평가 부서를 설치하여 평가 및 모니터링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후 유사 프로젝트 입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순환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법안에는 평가 체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정책집행에 있어 '환류를 통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 우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래에 설립하고, 이 위원회를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평가위원은 정책평가 전문가와 ODA 전문가, 프로젝트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며, 이를 자료화하여 공유함으로써 환류체계를 완성토록 할 수 있다.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요지

김 혜 경 / 경실련 국제위원장,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도 경제규모에 부합하도록 증액해야 된다는 국내적 요구와 국제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원조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내외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김부겸의원을 비롯한 21인의 국회의원이 "대외원조기본법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외원조의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본 법안은 중간단계의 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외원조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자칫 원조시스템의 다원화를 고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대외원조의 최고 심의 · 조정기구로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 ·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원조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었다.

대외원조기본법은 대외원조의 철학과 기본정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보다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과 시스템을 갖춰 원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 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의원의 법안이 중간단계에 해당하지만, 이런 수준에서라도 합의가 된 후에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법안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 회의에서 검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주요 검토의견

법안 명칭

이 법안은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에 대한 법이다. '국제개발협력법' 이라고 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 가 '국제개발협력' 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외원조' 든 '공적개발원조' 든 '정부개발원조(일본의 경우)' 든 정부의 원조에 해당하는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4조 기본원칙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에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개발목표 및 정책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이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6조 대외원조의 책임기관 등

■ 대외원조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외원조의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일원화된 체제가 바람직하다.

※ 국무조정실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2005.11.15)에 따르면, ▶무상원조 관련기관 간 조율 · 협의 강화, ▶유 · 무상원조 정책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 강화, ▶형식적인 일원화가 필요할 때에는 원조전담기구의 설치(시민사회측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단계에서는 무상원조를 외교통상부에서 총괄하고 유 · 무상원조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며, 2단계에서 유 · 무상원조를 포함하는 원조시스템 일원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원조시스템의 개선은 한국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춰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부처간 이해관계나 이기주의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7조 대외원조정책위원회

■ 대외원조정책위원회가 대외원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이며 정원이 15인 이내인데, 민간의 참여가 5인 이내라면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성이다. 민간 참여를 최소한 5인 이상으로 정해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해외원조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가 심의 ·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을 민간이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는) 위원회의 간사단체를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위원회 업무를 위한 실무인력의 공급, 해당업무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 대외원조정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현재처럼 국무조정실이 간사단체를 맡게 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인력과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10조 대외원조에 대한 평가

■ 대외원조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 대외원조의 발전을 위해 평가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 ODA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NGO와의 파트너십도 확대될 것이므로, 단순한 지원보다는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등한 민관협력방식이 바람직하다. 민간해외원조단체 뿐만 아니라, NGO,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대외원조 사업의 기획, 집행, 관리 평가에 있어서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여성, 인권, 환경 등의 크로스커팅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NGO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5조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해외원조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국(受援國)과의 우호협력 · 상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 보다는 '발전' 이 보다 많이 사용됨. 법의 목적만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제2조(기본이념)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추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헌법전문의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인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개발원조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 · 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대외원조"라 함은.... 3. "수원국"이라 함은... 4. "수원기구"라 함은.... 5. "무상원조"라 함은 현금 · 현물 · 인력 · 기술협력 또는 긴급재난구호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원기구에 대하여 분담금의 출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유상원조"라 함은 이자율 ·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이 국제자본시장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개발원조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할 필요가 없음] 2. 3. 4. 5. "무상원조"라 함은 현금 · 현물 · 인력 · 기술협력 또는 긴급재난구호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다자간원조는 유 · 무상원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 6. "유상원조"라 함은 이자율 · 상환기간 및 거

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적(亮許的) 조건 하에 수원국 또는 수원기구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적(亮許的) 조건으로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정부는 대외원조를 실시함에 있어 주권 · 내정불간섭 등 국제연합헌장의 원칙과 이 법의 목적 · 기본이념 및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외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정부는 대외원조를 실시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 · 기본이념 및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대외원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원조형태 및 원조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외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유 · 무상원조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조형태 및 원조사업 간의 연계가 필요]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외원조와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대외원조의 책임기관 등) ①양자간 원조 중에서 수원국에 대한 차관 등, 다자간 원조 중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 유상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외원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한다. ②양자간 원조 중에서 기술협력 · 재난구호 등, 다자간 원조 중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출연 등 무상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외원조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총괄한다.	제6조(대외원조의 책임기관 등) ① ②

③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외원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총괄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에 포함됨.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원조를 행자부에서 총괄할 경우,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④원조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대외원조정책위원회) ①대외원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대외원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대외원조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2. 대외원조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4.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평가 5. 긴급재난구호 활동 6. 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단체의 장	제7조(대외원조정책위원회) ①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대외원조에 관한 중요정책 2. 대외원조기본계획 3. 연간 시행계획 4. 대외원조에 대한 평가 5. 긴급재난구호 활동 6.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단체의 장

2. 대외원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⑥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부의안건에 관하여 사전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위원이 이를 관장한다. ⑧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외원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자 [NGO측에서는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⑥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⑧...
제8조(대외원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매 5년마다 대외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외원조정책의 기본방향 2. 대외원조의 기본목표 3. 대외원조의 적정규모 4. 분야별·지역별·사업형태별 중점지원 과제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원조의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은 총괄하는 대외원조 분야의 계획안을 각각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책임기관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대외원조를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책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시행계획이 제1항의 시행계획과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시행기관 간의 중복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②시행기관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대외원조에 대한 평가) ①국무총리는 매년 대외원조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외원조에 대한 평가) ①위원회는 대외원조정책 및 대외원조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평가결과가 대외원조사업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의.....
제11조(긴급재난구호) ①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호물품 및 장비의 지원 2. 현금지원 3. 의료단 · 구조대 · 봉사단 등 인력 파견 4.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하에 긴급재난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긴급재난구호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③긴급재난지원협의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긴급재난구호의 특례) 개발도상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재난의 피해국 등에 대하여 구호물품 · 구호금을 지원하거나 긴급구조대의 파견, 임시재해복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대외원조기본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
제13조(시행기관에 대한 지원) 책임기관은 시행기관이 대외원조와 관련된 조사 · 협의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수원국 또는 수원기구에 보내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민간해외원조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기구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정부는 해외원조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 민간기구가 대외원조의 계획, 집행, 평가 등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정부는 대외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 ·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대국민 교육 및 홍보) 정부는 대외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방안을 마련 ·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지방자치단체 · 대학 · 전문기관 또는 민간해외원조단체와 협력하여 대외원조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외원조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정부는 국제기	

구 ·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대외원조통계) ①시행기관은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대외원조제공내역을 책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은 각 시행기관의 대외원조제공내역을 종합하여 대외원조에 관한 통계(이하 "대외원조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책임기관은 대외원조통계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기관 그 밖의 관련단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된 대외원조통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대외원조통계) ① ② ③책임기관은 대외원조통계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및 정부부처, 그 밖의 관련단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 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총괄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총괄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하위법의 조항을 상위법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음]

ODA 관련 회의 일정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제3차 서울총회

■ 회의 명칭 :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제3차 총회(The Third Plenary Meeting,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 개최 시기 및 장소 : 2007. 9. 3(월) ~ 4(화) / 롯데호텔

■ 주　　관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 **주요 일정(안)**

시　간	일　　정
9.3(월) : 09:00 ~ 18:00	
09:00 – 09:10	● 의장 개회사
09:10 – 09:30	● 환영사 1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09:30 – 09:40	● 환영사 2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영상메세지
09:40 – 10:10	● 그간의 주요성과 : 리딩그룹 창설('06년 3월) 이후의 주요성과 발표 – 노르웨이
10:10 – 10:30	● 휴 식

시 간	일 정
10:30 – 12:30	● 각국 수석대표 연설
	: 각국별 3~4분 연설, 2~3개 국제기구 및 NGO에도 발언기회 제공
12:30 – 14:00	● 약식 오찬
14:00 – 18:00	● 라운드테이블 (RT) – 총 6개 주제를 3개 RT로 나누어 동시 진행
18:00 – 18:30	● 휴 식
18:30 – 20:30	● 만찬 : 외교통상부 제1차관 혹은 외교정책실장 주최 예정
9.4(화) : 09:00 ~ 13:00	
09:00 – 09:30	● 경과보고 1 – UNITAID : UNITAID 진전동향 설명 (UNITAID 사무국)
09:30 – 10:10	● 경과보고 2 – IFFIm, AMCs : IFFIm 및 AMCs 의 진전동향 설명(GAVI 사무국) ※ IFFIm :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 AMCs :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10 – 10:20	● 경과보고 3 : 회원국/국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예정
10:20 – 10:50	● 질의응답
11:10 – 11:30	● The Road to Doha : '08년도 도하에서 개최예정인 '개발재원 정상회의' 에 혁신적 개발재원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 – 프랑스
11:30 – 11:50	● 차기 의장국 선출
11:50 – 12:40	● RT 결과 정리
12:40 – 13:00	● 총회 결과 정리 : 주요 회의결과, 향후 추진방향 등

제2차 개발협력 정책대화

■ 회의 명칭 : 제2차 개발협력 정책대화
(The 2nd Policy Dialogue on Development Assistance)

■ 개최 시기 및 장소 : 2007. 9 .5(수) ~ 6(목) / 롯데호텔

■ 주　　관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 **주요 일정(안)**

시　간	일　　정
9.5(수) : 09:00 ~ 18:30	
09:00 – 09:30	● 등　록
09:30 – 09:40	● 환영사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09:40 – 10:00	● 개회사 : Hakan Fidan 터키개발협력청장 Richard Manning DAC 의장
10:00 – 11:30	● 세션1 : Lessons from Development for Development
11:30 – 11:45	● 휴　식
11:45 – 13:30	● 세션2 : Capacity Development
13:30 – 15:30	● 오　찬 : 신장범 KOICA 총재 주최
15:30 – 18:30	● 세션3 : Managing Development Co-operation –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19:30 – 21:30	● 만　찬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9.6(목) : 09:30 ~ 18:00	
9:30 – 12:00	● 세션4 : Development Assistance Partnerships
12:00 – 12:30	● 휴　식
12:30 – 13:00	● 결과정리 :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Richard Manning DAC 의장

시 간	일 정
ODA에 관한 대중인식 및 지원에 관한 워크샵 (Workshop on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for ODA)	
14:30-14:45	● 환영사
14:45-15:15	● 세션 1 : What's happening in OECD DAC Member Countries?
15:15-16:30	● 세션 2 : Case studies of Korea and Japan
16:30-17:45	● 세션 3 : Civil Society's Role
17:45-18:00	폐 회

제45차 OECD/DAC HLM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관으로 제45차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가 2007. 4.3-4 파리에서 개최되어 거버넌스 이슈, 원조 효과증진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방안, 이주와 개발문제 등을 논의했음

Ⅰ. 주요 내용

■ 국제사회의 원조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파리선언 이행, 원조관련 거버넌스 이슈를 논의

- 또한 이주를 통한 수원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송금을 통한 빈곤퇴치 등 개발과 이주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 한국 대표는 우리정부가 2015년 까지 ODA를 GNI의 0.25%(32억불)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ODA정책에 대한 DAC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금년 서울에서 9월 개최 예정인 Non-DAC 공여국 정책대화에 기존 공여국, Non-DAC공여국 및 BRICs 등 신흥공여국들이 모두 참석하여 원조효율성 제고에 대한 파리선언과 2008년 개최예정인 아크라회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OECD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금번 제 45차 회의는 작년에 개최된 개발환경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개발과 환경'에 이어 '개발과 안보', '개발과 이주' 등 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 제고(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Ⅱ. 상세 내용

1. 취약국가 대책 및 안보와 개발원조 Session

가. 룩셈부르크

- 수원국의 안보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개발, 외교, 국방 삼자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초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나. EC (Manservisi 개발총국장)

- 수원국별로 상이한 취약성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
- 수원국 주도로 국민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제공, 역내 지역기구와 협조하여 역내 정치구도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
- 안보시스템개혁(Security System Reform) 과정에서 재원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다. 영국 (Chakrabarti DFID 차장)

- 취약국가 이슈관련 도전으로 수원국 현지에서 DAC의 논의를 실제로 실행하는 문제, 성과 도출, 신흥공여국과 기존 공여국간 협조를 통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
- 취약국가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이해를 제고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통한 성과 도출이 필요

라. 일본 (베쇼 국제협력국장)

- 취약국가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의 도입을 제안

마. 캐나다 (CIDA 총재)

- 취약국가의 경우 원조전달(aid delivery)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국가와 5년 단위의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성공여부는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원조의 성공여부' 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

바. 미국

- 수원국의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PDG)를 추진
- SSR에 있어서 국방분야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인권개념의 도입이 필요

사. 프랑스 (Etienne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총국장)

- 취약국가를 결정할 기준과 국가의 취약성을

분석할 메트릭스가 중요하며, NGO를 통한 지원 등 상황별로 올바른 지원 방법이 필요

아. 스위스 (Fust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인도적인 지원과 군사작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간의 구별이 필요

자. 노르웨이 (Solheim 외교부 국제개발장관)

■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을 예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시 수원국내 정치역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여국의 선호(preference)를 가급적 배제해야 함

차. 호주

■ SSR 논의를 위해 개발, 외교, 국방간 고위급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함

카. 오스트리아 (Freudenschuss 외교부 개발협력총국장)

■ 특정한 상황에 대한 사회의 탄력성(resilience)를 강화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타. 독일 (Wieczorek-zeul 경제개발협력장관)

■ 자원이 많은 수원국의 경우 국가의 취약성이 자원을 둘러싼 부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취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를 강화해야 함

파. 슬로바키아

■ UN안보리 의장국 수임시 SSR을 중요의제로 다루었고, 각국이 SSR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상이

■ SSR을 위해 공여국간 협조, 지역기구의 활용, 유엔의 역할 강화가 필요

하. DAC 의장

■ 취약국가와 SSR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외교, 개발, 국방분야간 범정부적 접근법에 대한 고위급회의의 준비가 필요

2. 반부패와 개발원조 Session

가. 네덜란드 (Koenders 외교부 개발협력장관)

■ 부패는 bad governance의 징후이며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unfair distribution of resource)을 야기하여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 유엔반부패 협약의 이행, 각국간 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를 강화해야 함

나. 노르웨이

- 수단 남부지역의 경우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자원개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이 중요
- 반부패문제는 G-8, 유엔 고위급 회의 등에서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다. 스위스, 벨기에

-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3. 국제지원구조 및 유엔개혁 Session

가. Dervis UNDP 총재

- 유엔 일관성 제고를 위한 패널보고서에 따라 8개국에 대한 시범사례(pilot case)가 진행 중
- 동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성(coherence)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개혁을 진행할 예정

나. 캐나다

- 과거 피어슨 보고서나 잭슨 보고서가 지적한 UNDP의 조정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법이 필요

다. 미국

- 패널보고서의 전체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환경, 인권, CERF에 대한 지나친 강조, MDG Funding 메카니즘 등 일부에는 이견이 존재

라. 스웨덴 (Stymne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장관)

- 양자지원과 다자지원의 조화의 관점에서 스웨덴 원조의 유엔 pilot case에 대한 조화가 필요

마. 독일

- G-8 국가들이 개발원조와 관련 '99년 부채탕감문제, 글로벌 펀드의 설립, '05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증대와 부채탕감 정책을 추진중
- 금년 G-8의 주제로 성장과 책임(Grow & Responsibility)을 설정, 세계경제와 아프리카

에 대한 영향,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공재 확보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

4.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도전 Session

가. DAC 원조효과작업반 의장

■ 파리선언 중간점검결과 공여기관의 수원국 현지 사무소의 자율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건 없는(untied) 원조화 진척이 느리며, 수원국 현지 제도 활용 부족

■ 파리선언에 대한 공여국들의 고민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

나. 아일랜드 (Lenihan 외교부 해외개발 및 인권담당 차관)

■ 파리선언은 원조구조의 good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유용한 도구

■ 공여국 국내에서 파리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원조기관들이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시행해야 함

다. 일본

■ 파리선언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지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파리선언이 수원국들에게 주는 의미와, 신흥공여국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실제 이행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

라. DAC 의장

■ 파리선언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에 덴마크 등 4개 DAC 회원국이 참여하였고, 여타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마. 핀란드 (Majanen 외교부 개발정책총국장)

■ 파리선언 이행이 공여국 의회 및 국민과 원조기관간 의사소통의 문제 (communication problem)

■ 파리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및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서 EU Code of Conduct를 준수해야 함

바. 벨기에 (Adriaensens 외교부 개발협력총국장)

■ 파리선언이 분권화된(fragmentated) 원조구조에 대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 제공

■ 공여국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파리선언 이행결과를 보여주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파리선언 점검에 있어서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 이행 점검이 부족하며, EU Code of Conduct가 여타 공여국에게도 확산

될 필요가 있음

사. 폴란드

- 파리선언 개념을 포함한 원조계획을 작성 중
- 최근 OECD 개발센터 주관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원국에 대한 함의를 모색 중

아. 프랑스

- 파리선언 이행점검은 특정 국가를 비판(naming & shaming)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공여국 국민과 의회에 대한 설명 자료로 이용할 예정

자. 호주

- 파리선언 이행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리선언의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DAC 통계작업반의 활동이 필요

차. 한국

- 파리선언에 대한 신흥공여국들의 명확한 인식 일치가 필요
- 파리선언에 대한 각국의 기여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non-DAC 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간 공동의 이해와 협력강화가 필요

카. 덴마크 (Tornaes 외교부 개발협력장관)

- 파리선언은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 정치인에게는 실제 결과가 중요하며 원조 전달과정은 복잡해서는 안 됨.

타. 미국

-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수원국 거버넌스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필요

파. 네덜란드

- 파리선언 이행을 위해서 공여국들이 원조에 대한 flagship을 포기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긴요
- 신흥공여국들도 기존의 파리선언 체제에 순응해야 함

하. DAC 의장

- 파리선언 이행이 원조의 flagship을 약화시키지만 원조의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공여국 국

민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음

-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non-DAC 공여국 회의가 중요

5. 이주(migration)와 개발 Session

가. Gurria OECD 사무총장

- 이주문제는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며 이주민 통합(integration)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주와 개발간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긴요함

나. 덴마크

- 외교부와 국제이민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gration)간 T/F를 구성하여 인도적인 지원 측면에서 케냐와 소말리아에 이주민 수용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이 긴요

다. 독일

- 선후진국간 고급인력의 순환 교류(circular migration)를 통해 수원국 경제개발 촉진 가능

라. 스페인 (De Laiglesia 외교부 국제협력단 사무총장)

- 이주문제는 선진국 관련부처간 범정부적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정책사안
- 이주자 송금액(remittance)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스페인 정부는 수원국 정부와 송금제도 개선을 협의 중
- 이러한 노력은 불법 송금을 줄이고 송금을 위한 공식 채널을 확보하여 해외 송금액에 대한 수원국의 통제를 통해 수원국 경제발전에 기여 가능

마. 개발센터

- 세계화 진전에 따라 자본, 상품, 서비스의 이동은 논의되지만 인력의 이동은 논의가 없음
- 선진국 내 이주민 그룹(diaspora)이 개도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 가능
- 개발과 이주는 개도국 숙련노동자의 유출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비숙련 노동자의 송금이 수원국 절대빈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상관관계 존재
- 이주문제는 이주가 수원국의 납세자를 줄이고, 인적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수원국의 경제개발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바. 영국

- 이주문제는 내무부, 복지부, 국제개발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정책사항
- 말라위의 많은 보건인력들이 영국에서 활동하여 말라위의 보건 시스템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 소개

사. 스웨덴

- 이주와 개발문제를 개발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이주문제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나 외교부와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함
- 여성 이주자가 남성보다 더 많은 송금을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주와 개발문제에 있어서 성평등(gender) 측면을 고려할 필요를 제기

아. 벨기에

- 7월 벨기에에서 이주문제관련 유엔 글로벌 포럼을 개최예정이며 이주와 개발문제, 고령화 사회와 이주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자. OECD 노동사회국

- 이주문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 수원국 고급인력 유출(brain drain)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안보관련 지출예산의 ODA 계상문제

가. 스웨덴

- 안보관련 활동의 ODA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관련 활동과 개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 필요

나. 이탈리아 (Sentinelli 외교부 차관)

- 6개 안보관련 활동의 ODA 계상이 2년 전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PKO 활동,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근 논의 되고 있는데 ODA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다. 포르투갈 (Cravinho 외교부 외부협력 차관)

- 안보관련 활동을 너무 광범위하게 원조에 포함할 경우 공여국내 재원배분 시 개발원조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예산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

7. 기타

가. DAC은 신임 DAC 의장 선출절차관련 7월까지 입후보, 회원국의 인터뷰 절차 이후 11월 신임 DAC 의장을 선출할 예정

나. DAC은 원조조건 철회(untied) 이슈와 관련하여 수원국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며 최근 호주정부의 원조 언타이드 결정에 긍정적

■ 최빈국은 아니지만 고채무빈곤국가(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에 속하는 국가에 대한 2001년 언타이드 권고의 적용문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문의(프랑스, 스페인은 동 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개진)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 개발글로벌 포럼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계기에 제1차 개발글로벌포럼이 2007.4.3 파리에서 개최되었음

Ⅰ. 주요 내용

■ 금번 포럼은 신흥원조공여국 등장 등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의 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 DAC 회원국, 우리나라 등 신흥공여국의 고위 관계자 및 수원국, 민간 공여단체, UNDP 및 세계은행 관계자 참석

■ 우리측 대표는 '제2세션 : 신흥공여국과 개발원조' 에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발표하여 최근 신흥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제고

- 특히 우리정부가 신흥공여국과 기존공여국간 전략적인 협력을 위해 오는 9월 제2차 OECD non-DAC 공여국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큰 관심 표명

■ 금번 포럼은 개발원조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DAC 회원국, 신흥공여국, 다자개발기구, 민간원조단체간의 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Ⅱ. 상세 내용

1. 신흥공여국과 개발원조 Session

가. 한국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 'ODA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MDGs를 개발원조 사업에 반영

■ 수원국의 ownership 강화를 위해서 베트남

등 주요 수원국과 ODA 정책대화, country program 작성을 추진

-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개발원조 사업 절차를 단순화
-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상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수출진흥이 효과적인 방안이었음을 설명
- 신흥공여국들이 수원국들에게 다양한 빈곤퇴치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음을 강조

나. 브라질 (Miranda 경제기획부 국제담당 장관)

- 여타 중남미 수원국과 개발전략 공유(sharing)를 위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관점에서 개발원조를 접근
- 재원이 부족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등 지역개발은행과 협력이 필요
- 경험 공유를 위해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

다. 태국 (Xuto 외무장관 특보)

- MDGs 달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
- 신흥공여국들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수원국들과 협력관계를 구축
- 수원국 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과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중요하다고 강조

라. IMF (Ahmed 국제협력국장)

- 신흥공여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발원조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를 위해서 정보공유가 필요
- 특히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 수원국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고려한 유상원조 제공, 신흥공여국과의 솔직한 대화채널 확보를 강조

마. 세네갈

- 신흥공여국들이 조건(conditionality)없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수원국 입장에서는 원조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

바. 에티오피아

- conditionality와 관련 민주주의, 인권 등은 수원국 주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외부의 조건부과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사. 일본 (베쇼 국제협력국장)

- 일부 신흥 공여국과 삼각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10차에 걸쳐 양자 원조정

책대화를 개최한 경험을 소개

- 신흥공여국과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9월 제2차 OECD non-DAC 공여국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준데 대해 사의 표명

아. 아시아개발은행(ADB)

- 역내 신흥공여국의 등장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활성화, 역내 인프라 건설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

2. 다자간 원조 Session

가. UNDP (Dervis 총재)

- 최근 유엔 개혁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Delivering as One Initiative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유엔이 원조사업 현장에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 지역개발은행은 개별 공여국을 보완하면서 역내 인프라 건설, 역내 국가의 주인의식 제고, 역내 국가의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에서 비교우위 보유
- 제한된 재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다. EC

- EC가 제공하는 ODA가 전체의 57%를 차지
- 다양한 원조행위자의 등장으로 원조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여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를 채택
- 각국의 원조정책을 규율할 목적으로 Code of Conduct를 채택하여 역내 공여국 및 수원국에게 모범사례를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라. 스위스

- 원조 시행기관의 책임구조(accountability architecture)관련 다자원조기구는 개별 자금 공여국에 책임을 지고, 개별 공여국은 다자기구의 효율성 강화를 전제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
- 유엔 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

마.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원조 관련 연구기관)

- 다자개발은행들이 정치적인 위기(political crisis)를 겪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쿼터 조정 등 자체적인 가버넌스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일부 유럽국가들이 과다한 쿼터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바. UNDP

■ 파리선언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세부 행동지침(Code of Conduct) 결여, 사업현장에서 투명성과 일관성 부족을 거론

사. 개발센터측

■ 개발원조가 더딘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로 수원국의 필요보다는 공여국내의 선호(domestic preference)에 초점을 둔 원조행태를 지적

3. 재정기구와 글로벌 프로그램 Session

가. 글로벌 펀드

■ 원조구조(aid architecture) 논의에서 수원국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펀드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

나. Thalwitz 세계은행 글로벌파트너쉽 국장

■ 글로벌 프로그램은 보건, 교육분야에서 국제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국가 주도의 양자지원과 회원국간 합의에 바탕을 둔 다자지원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

다. Leer Foundation (네덜란드 민간파운데이션)

■ 개발원조에서 민간기구가 최근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 공여국과의 협조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라. 방글라데시

■ 원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향상방안과 성과도출을 위해서 원조사업 현장에서 공여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

마. 가나

■ 글로벌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부적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원국내에서 재원의 사용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HIV/AIDS 퇴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 가능

바. 에티오피아

■ 글로벌 프로그램이 수원국 입장에서 질병퇴치 등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지원과 글로벌 프로그램간에 적절한 조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4. 정책결정자 Session

가. 에티오피아

- 원조구조(aid architecture)가 선진공여국의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
- 공여국의 원조중단은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실확인 작업 진행 후에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

나. 국제개발협회(IDA)

- 르완다의 경우 보건분야에 대한 원조의 75%가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수원국의 주인의식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등장
- 특정국가에 대한 원조집중(aid darling)문제와 더불어 특정분야에 대한 원조의 집중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 IDA의 수원국 실적 기반 지원(performance-based operation) 시스템이 원조성과를 제고할 가능성 지적

다. 프랑스

-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의 성공여부는 수원국 주민에게 실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 여부에 좌우
- 항공권 연대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은 국제적인 연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
-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해 NGO, 시민단체, 지자체를 원조활동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라. Standard & Chartered

- MDG 달성이 기존 원조방식만으로는 불가하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중국과 개도국간 무역 등 남남 협력이 개도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 금번 글로벌 포럼이 민간과 공여국간 이해를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
- 한국 등 신흥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마. DAC 의장

- 금번 글로벌 포럼을 통해서 기존 공여국, 신흥공여국, 민간 파운데이션, 글로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위자간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 조성 기대
-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OECD non-DAC 공여국 회의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갈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DAC 최근 동향

: Environet 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환경과 개발 협력 네트워크(일명 Environet)' 제6차 회의가 Paul Samson 의장(캐나다 개발원조청 국장) 주재로 2007. 5.23-24간 파리에서 개최되어 '천연자원과 빈곤층을 위한 성장 보고서' 초안, 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등을 논의하였음

Ⅰ. 주요 내용

■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가의 천연자원이 전체 국부의 26%인 점, 저소득국의 천연 자원 관리 개선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 천연자원의 관리가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아래 7개 부문의 천연 자원 관리 개선이 장기적 차원에서의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verty growth)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금년 말까지 마련키로 함.

- 수산(overfishing 근절), 산림(산림 관리 규정 집행 강화), 야생위주 관광(불법적 야생동물 교역 근절), 토지 · 농업, 물(수자원 관리/인프라 투자), 광물 · 석유, 재생 에너지

■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중의 하나인 전략적 환경 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개발 원조의 환경차원의 효과 제고를 위한 평가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며, 동 평가 도구의 교육 및 사례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임

■ 사무국은 환경 재정 개혁,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의 여타 이행조치 등 분야별, 지역별로 원조 공여국들

의 수원국별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정리된 초안 보고서를 배포하고, 계속 동 작업을 진행키로 함

■ 개도국 내 리오 환경 협약의 이행 지원 차원에서 원조에 대한 통계 작업의 개선 노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 DAC 통계 작업반과 공동으로 3년간 시험 실시중인 Credit Reporting System(원조건별 통계)에 리오 환경 평가 지수(Rio Marker)를 포함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사무국은 소개하였으나, 회원국들이 환경 분야 보고를 제대로 이행치 않음에 따라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 결과, 일부 회원국들의 유보적인 의견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동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 개별국가들의 환경 분야 보고를 계속 이행키로 함

Ⅱ. 건의 사항

■ 2007-2008년간 예정된 DAC 회원국에 대한 Peer-review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평가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사무국 및 일부 심사국들이 언급하였고, 우리나라도 향후 DAC 가입 전 환경친화적 개발전략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스웨덴의 경우, 환경 관련 원조(environment focused aid)가 부채탕감 및 긴급 구조원조 등을 제외한 전체 원조액(total sector-allocable aid)중 60%에 달하며,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등에 대한 원조액중 80% 이상이 환경관련 원조임(2003-2004년 통계 기준)
- 2001-2004년 공약 기준으로 DAC 회원국들의 UN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해 추진된 관련 양자 원조액은 전체 양자 원조액 중 2.8%를 차지함(미국은 0.7%대인 반면 일본은 7.1%임)

■ DAC 산하 작업반들 간에도 인권, 환경, 성평등 등 cross-cutting 이슈들이 고위급 레벨의 DAC 논의 및 2008년 가나 고위급 포럼에서 우선순위로 채택되기 위해 다소 경쟁적인 것으로 관측되며, 환경과 개발협력 네트워크도 환경의 개발협력 내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워크샵 및 각종 회의 개최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타 작업반과의 공동 작업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overlapping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미국은 환경작업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일본(외교부 범지구적 이슈 담당과 사무관 참석)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기술적 이슈의 논의 구별과 더불어 환경 분야

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

※ 일본은 9월 Non-DAC 공여국 서울 회의의 의제에 대한 관심 표명

■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가 작년 9월 8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대표가 참석했으며, 2008년 바로셀로나 총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석을 요청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DAC 덴마크 동료검토 회의 결과

덴마크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검토 회의가 2007.6.8 Mr. Manning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음

※ 덴마크는 외무부 개발협력장관(Ms. Ulla Tornaes)을 수석대표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덴마크 외무부에는 외무장관과 개발협력장관이 각각 있음), 네덜란드 및 그리스가 주심사국을 맡음

Ⅰ. 주요 내용

■ 개발원조위(DAC)는 덴마크가 2005년에 GNI의 0.81%인 21억1천만불을 대외원조에 사용하는 주요 공여국의 하나로서 향후 최소한 GNI의 0.8%를 공여하기로 한 덴마크 정부 결정을 치하하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기를 권장

■ 상기 사유로 인해 금번 동료검토 회의에서 주검토국, DAC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덴마크의 ODA 정책에 대해 칭찬 일색의 발언을 하였으며, 특히 DAC 사무국은 덴마크가 도입한 분권화 정책(decentralization: 현지 원조기관 및 대사관이 원조의 주된 집행자로 역할)이 효과적인 원조 전달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

– 반면,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과감한 지원(risk-taking)이 약화되고, 현지 기관의 비전문성, 부패 가능성, 공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조의 비효율성을 우려

Ⅱ. 상세 내용

※ 동료검토 회의는 덴마크 대표단 소개, 수석대표 연설, 사무국 보고, 주심사국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1. 전반적 구조 및 정책 방향

가.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연설

- 가나 및 네팔 현장 답사,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의 등 주심사국 및 사무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및 권고사항은 매우 유익
- 덴마크의 대외원조의 기본 이념은 빈곤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국제이주, 남녀평등, 능력배양, 반부패 노력 등이 주된 관심 사항
- 덴마크 양자 원조의 2/3정도를 아프리카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원조전달의 효과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권화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는 바,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통합된 체제를 유지

나. 사무국 보고

- 네팔(취약국가 지원 시범사례) 및 가나(효과성 제고 시범 사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덴마크가 추진 중인 분권화 정책이 유용함을 평가
- 다만, 질적 향상 및 보다 결과 지향적 추진, 일부 분야 전문가 부족 현상 등은 보완해야 할 것이며, 현장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원칙과 현실성을 균형되게 유지할 필요 있음

다. 심사국 보고 : 그리스, 네덜란드

- 코펜하겐, 네팔 및 가나 현장에서의 협조에 매우 만족하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음
- GNI의 0.8% 공여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원조의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희망
- 분권화와 관련,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독일

- 우선지원 분야가 너무 많음

마. 미국

- 덴마크의 대외원조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개발 정책 일관성 증진

- 주심사국은 부처간협조위원회를 통해 덴마크 외무부 업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과 EU회원국 및 OECD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
- 미국은 덴마크의 반부패 활동이 매우 인상적인 바, 경험과 교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

3. 원조 규모 및 배분

■ 주심사국은 덴마크 정부가 향후 원조규모를 최소한 GNI의 0.8%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치하하고 동 정책이 계속되길 권고함. 또한, 취약국가에 대한 전략을 발전시켜 줄 것을 권고

■ 미국은 덴마크의 양자 원조 중 새로운 주요 공여국인 중국에 대한 원조 내용을 문의한 바, 덴마크는 환경, 에너지, 인권분야에 대한 원조라고 답변

4. 원조 관리 및 집행

■ 주심사국은 원조 효과성과 관련, 덴마크가 공동지원 전략 및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가 전략과정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조직, 직원 및 예산 배분의 효과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 주심사국은 덴마크 등록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Mixed Credit Programme이 잔존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LDC 국가에 대한 ODA의 untying을 권고한 2001년도 DAC 권고에 부합되지 않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

– 덴마크는 동 제도에 대한 예산은 전체 원조규모의 3%인 4천만 유로 정도이며 수출 증진책이 아니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untying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

■ 일부 회원국들은 분권화에 따른 질적 향상조치의 중요성, 현지 직원의 질 향상 필요 등을 제기하고, 미국은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고 제기

■ 덴마크는 분권화 조치 이후 본부 인력의 25%를 축소할 수 있었으며, 현장 실무운영 책임을 현지 대사관에 위임하였다고 설명

5. 인도적 원조

■ 주심사국은 덴마크가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의 리더국가의 하나로 국제정책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DAC은 덴마크 정부의 2002년 인도적 지원성명서를 update하고, 인도적 지원이 정치, 군사적 목적이 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 줄 것을 요청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 2006년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

OECD 사무국은 2007. 4.3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개최 계기에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실적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음

Ⅰ. 주요 내용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의 2006년도 순 원조액(Net ODA)은 1,039억불로 2005년도 대비 5.1% 감소(2005년도 1,068억불)

- GNI 대비 원조액은 0.30%로 2005년의 0.33% 보다 감소

■ 주요 공여국의 2006년도 개발원조의 감소는 2005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모 부채탕감에 기인

- 2006년도 통계에는 192억불의 부채탕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채탕감을 제외할 경우 1.8%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ODA는 4.47억불로 2005년도 7.52억불에 비해 44.6% 감소하였으며 GNI 대비 0.05% 기록 (2005년도 0.1%)

- 다자원조기구에 대한 2005년도 대규모 공여에 기인

■ 유엔의 GNI 0.7%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이며, 최대 공여국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순

■ 2007년도에도 DAC 회원국의 ODA는 부채탕감이 완료됨에 따라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주요 공여국들이 ODA 증액 공약을 실천하게 되어 부채탕감을 제외한 ODA는 증가할 전망

II. 상세 내용

1. 주요 공여국 ODA 현황

■ 미국은 227억불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20% 하락하였으며 (GNI 대비 0.17%로 하락), 이는 부채탕감액 감소에 기인함

■ 일본은 116억불(GNI 의 0.25%)을 기록하여 9.6 % 하락함

■ EU DAC 회원국 15개국의 총 ODA는 589억불로 2005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GNI 대비 0.43%로서 EU 전체 회원국의 목표치인 0.39 %를 초과하였음

- 2006년도 ODA 증가는 주로 부채탕감에 기인
- EC(EU집행위)의 ODA는 102억불이며 5.7% 증가

2. 향후 전망

■ 2007년도 DAC 회원국의 ODA는 나이지리아 및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이 200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주요 공여국들이 ODA 증액 공약을 실천하기 시작함에 따라 부채탕감을 제외한 ODA는 증가할 전망임

- EU는 2010년 까지 회원국 ODA를 GNI의 0.56% 까지 증액하고, 특히 DAC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0.51%로 증액토록 2005년에 합의
- 호주는 2010년까지 40억 호주달러로 2배 증액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2005-2009년 기간 중 총100억 달러 증액 예정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

제 58차 DAC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제 28차 DAC 통계작업반 회의가 22개 회원국 및 옵저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 6.11~12 양일간 개최되었음

Ⅰ. 주요 내용

1. 신규 원조형태 구분안 (New Classification of Type of Aid)

■ 신규 원조형태의 구분 안은 기존의 DAC 테이블 1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협력(TC), 긴급원조, 식량원조, NGO지원, 행정성경비, 개발인식증진비 등으로 나뉘던 것을 (A)프로젝트타입지원, (B)예산지원 및 현금이전, (C)인적교류협력[Exchange schemes], (D)소규모지식공유, (E)식량원조, (F)인도적지원, (G)부채탕감, (H)공여국내원조 등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골자로 함

2. DAC통계(집계통계)와 CRS통계(건별통계)의 통합(CRS++)

■ 통계사무국은 회원국들이 DAC통계(집계통계)와 CRS통계(건별통계)의 통합보고양식(CRS++)체계로 2006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권고함. 한국은 2006년 실적부터 통합보고형식으로 9월말 이전 보고를 목표로 함

3.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 및 INGO, PPP, Network

■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리스트에 UNITAID, IFFIm, BSEC외 다수 기구들이 추가되었으며 UNPKO에 대한 지원은 지원액 중 7%를 ODA로 계상할 수 있음. 한편, PBF에 대한 2006년

도 지원액은 예외적으로 전액 계상하되 양자간 지원으로 보고

Ⅱ. 건의 사항

1. 파리선언 이행성과 설문조사

■ 2006년 파리선언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선 설문조사에서 평가지표별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다수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설문 결과자료에서 한국은 34개국 중 3개국에서 전체 ODA 중 4%에 해당하는 지원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았는데 10개 항목 중 기술협력 관련지표를 제외 하고는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공여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치 달성(baseline)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건별통계와 집계통계 통합보고(CRS++)

■ 금년 2006년도의 ODA 지원실적에 대한 확정통계 보고 시 한국은 최초로 통합보고체계(CRS++)로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관련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함. 현재 KOICA는 CRS++ 기준의 시스템 재구축 개발이 완료되었고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보고시스템도 개선 중

3. ODA 통계 작성 교육 실시 필요

■ DAC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 DAC 차원의 ODA 통계가 대국민의 ODA 이해 및 설득을 위해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는 원조정책 수립 및 평가 도구인 바, DAC가 적극 추진 중인 통합보고체계 도입 이후 정확한 정보 작성 및 주요 실적의 누락 방지를 위해 국내 각 부처 관련 기관 원조 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통계작성 교육이 긴요

Ⅲ. 상세 내용

1.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직에 벨기에 Mr. Geert Deserranno, 부의장직에 오스트리아의 Ms. Hedwig Riegler 및 일본의 Mr. Hitoshi Shoji 대표가 선출됨. 신임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ODA관련 규정결정, 원조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통계작업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동안 지금까지의 작업반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임을 언급

2. 의제승인

■ 58차 통계작업반 회의의 의제가 원안 그대로 승인되었으며 의장은 OECD 주재 EC 대표인

Mr. Franco Gonzato를 소개하며 통계작업반 회의의 DAC facilitator로 참여하였음을 설명

3. 2007년 2월 통계작업반 비공식 회의록 승인

■ 원조형태의 신규 분류 안, ODA 건별통계와 집계통계의 통합작업(CRS++) 및 양자/다자 보고 관련 통계작성지침 보완에 대한 협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이의 없이 승인하였으나 비공식 회의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음

4. 원조형태구분안(New Classification of Type of Aid) 검토

■ 신규 원조형태의 구분은 기존의 DAC 테이블 1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협력(TC), 긴급원조, 식량원조, NGO지원,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증진비 등으로 나뉘던 것을 (A)프로젝트타입지원, (B)예산지원 및 현금이전, (C)인적교류협력[Exchange schemes], (D)소규모 지식공유, (E)식량원조, (F)인도적지원, (G)부채탕감, (H)공여국내원조 등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사무국은 2월회의 결과에 따라 덴마크와 영국 및 핀란드의 2006년 실적에 신규 원조형태 분류 안을 적용해 본 결과 몇 가지 정의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면 현행 원조형태 분류기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10월과 11월 이전까지 몇 회원국들의 2006년 실적에 대한 테스트 참여 및 이후 각 원조형태 항목에 대한 설명자료 초안 작성 작업을 2008년 1월까지 마쳐서 2008년 2월이나 3월 중에 있을 비공식회의에서 최종 정리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힘

■ GOVNET의 담당자는 신규 분류 안이 파리선언의 맥락에서 역량개발과 관련된 기술협력 부문의 실적을 상세 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당 분야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임을 언급하며 신규 분류작업의 중요성을 강조

■ 테스트 국가로 참여했던 덴마크는 2006년 실적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적용 가능해 보였으나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경우 분류안의 항목 중 어디로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국제수지관련 정보는 하위분류안과 국제수지 구분 값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고함. 그러나 원조형태의 재분류 작업의 중요성과 파리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지적하고 세부 정의의 명확성 제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언급

■ 영국도 테스트 결과에 대해 덴마크와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오스트리아는 현행 원조형태 구분이 실제와는 달리 뒤쳐져 있어 재분류 작

업이 매우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년도 작업반회의에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류 안 확정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이에 각 국은 신규원조형태 구분 안 마련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스웨덴 및 캐나다는 추가적인 테스트에 참여의사를 밝힘

■ 한국은 아직 DAC 비회원국이지만 가입을 준비하며 통계 부문에서의 DAC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 역시 신규 원조형태 구분 안에 대한 원칙적으로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단, 타 공여국들의 테스트 결과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물자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구분항목이 없는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하위 항목의 요소들이 혼합되어진 형태가 있을 수 있어 항목의 정의 및 분류 가이드라인에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일본과 독일은 신규 원조형태 분류안의 도입은 중요성은 인정하나 급격한 시스템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임을 지적하며 과거 자료들에 대한 문제 및 국내 시스템 및 절차의 문제 등 행정적인 부담이 클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프랑스도 일부 항목의 분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스위스도 너무 세부적인 구분은 적용이 어려움을 언급

■ 2월 회의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수정된 구분 안은 아직 각 항목들에 대한 정의작업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해당 테스크 팀에서 설명자료 작성과 함께 조정해 나가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특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독일, 일본, 프랑스에 대해 테스크 팀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현행 구분 안이 최근의 정책 이슈들을 위한 분석을 지원할 수 없어서 새로운 구분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통합하고 너무 큰 사업들의 경우 세분화하여 정책분석에 알맞도록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원조형태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언급

■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는 수정된 분류 안을 테스트 하는데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신규 원조형태 구분 안 테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은 사무국에 6월 말 이전 연락하기로 하였고, 보완된 구분 초안이 완성된 후에 2008년 1사분기 중 비공식 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음. 2009년 실적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규 원조형태 구분안의 프로젝트는 기존 분류의 투자프로젝트(수원국 내 유형자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를 의미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의가 테스크 팀의 초안을 통해 정리될 예정임

5. 원조성과요약양식(Result at a glance template)

■ 사무국은 베트남에서의 영국의 예시를 통한 원조성과 요약양식을 설명하였음. 본 양식은 MDG, 투입자원현황, 파리선언 원조효과성지표 성과, 수원국 분야별 총 자원 현황 및 투입계획, 분야별 외부 원조자금 등의 요약표를 포함하고 있음. 해당 자료는 원조흐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별 성과중심의 현황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의 원조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언급

■ 오스트리아는 투입자원현황 부분에 총 외채규모 자료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캐나다는 최근의 ODA 실적이 부채탕감으로 인해 해당 수원국에 대한 실질 원조공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왜곡된 해석이 가능함을 지적하였음. 이에 사무국은 형태를 변경하기 보다는 주석 처리 등을 통해 최근의 부채탕감 증가 등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외채규모 자료 추가의 가능성 여부는 확인 후 반영하기로 답변

6. 예산지원(Budget Support)

■ 사무국은 베트남에 대한 일반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9개의 공여국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각기 정책 마커를 다르게 해석하여 실적보고를 하였음을 예시로 들어 일반예산지원 및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마커 적용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적용 필요성을 언급

■ 각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를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일반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정책마커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룹과 일반예산지원과 섹터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정책마커를 보고하고 있는 그룹으로 나뉘었음. 공통적으로 단일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이에 사무국은 현재로서 공여국들 마다 내부 정치적 요구 등의 이유로 일반예산지원에 대한 정책마커 적용여부 관련 국제적 비교 가능한 기준을 가지기 힘든 상황임을 인정하고 관심 있는 회원국들과 해당 이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7. 다자기구에 대한, 다자기구를 통한, 다자기구에 의한 원조실적 보고

■ 사무국은 보다 정확한 다자기구관련, 특히

UN 기구들 원조실적에 대한 UN과 DAC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의 건별통계(CRS) 보고 시 원조수행채널코드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다자를 통한 원조실적에 대해 지역이나 분야 중 한 가지가 정해진(earmarked) 사업인 경우 다자간지원이 아닌 양자간 지원으로 보고하고 순수한(core)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만 다자간 지원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밝힘

■ EC는 UN ODA 실적통계의 개선을 위한 UN과의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사무국은 타 회원국들의 참여도 환영함을 언급

※ 한국은 2006년도 ODA 실적 보고 시 지역이나 분야 등이 명시적인 KOICA의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실적을 양자간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건별통계의 원조수행채널 코드를 활용하여 양자간 및 다자간으로 보고되는 모든 흐름은 분석이 가능할 것임

8. DAC 통계작성지침 Annex2 업데이트

가. 국제기구, INGO, PPP, Network 업데이트

■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에 대한 지원은 78%의 비율로 ODA 계상이 가능하고, EBRD-TRWB (Trust Fund for the Western Balkans) 와 MDRP (Multi-Country Demobili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에 대한 지원은 전액 ODA 계상 가능한 국제기구로 원안 통과됨

■ INGO 중 International Alert,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에 대한 지원은 ODA 계상 가능, Search for Common Ground 는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됨

■ PPP는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SAS (Small Arms Survey), UNITAID가 ODA 계상 가능해 졌으며, Network에서는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이 신규로 ODA 계상 가능한 리스트에 포함되었음

※ UNITAID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빈곤퇴치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나. UN 평화유지활동 ODA 계상비율

■ UN PKO 에 대한 ODA 계상비율은 7%임. ODA 계상 대상이 되는 UN평화유지활동 지

역은 콩고(민),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라이베리아, 수단, 레바논, 서부사하라, 그루지아, 코소보,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등 총 11개 지역임. Truce Supervision, 인도/파키스탄, 사이프러스, UNDOF 등은 순수 군사목적이거나 수원국 리스트 외 지역으로 ODA 계상에서 제외됨

■ 또한 계상 가능한 활동에는 인도적지원, DDR, 국내이주민 복귀 및 재통합작업, 성평등 관련이슈, 개발협력 조정, 인권, 아동보호, 민간지뢰관련활동, 선거지원, 커뮤니케이션 및 대국민홍보, 민간경찰부문, 법치 및 사법시스템 지원 등이 포함됨

다. UN평화유지기금(PBF)의 ODA 적합성

■ 2006년도에 이루어진 PBF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ODA 목적에 부합되는 데에만 쓰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된 것임을 인정하여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해당 실적을 전액 계상하되, 특정 목적을 명시한 지원이므로 양자간으로 계상하도록 함

※ 한국은 2006년 PBF에 3백만불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ODA 확정통계 보고 시 해당 실적의 누락 없이 양자간 지원으로 전액 계상하여야 함

■ ODA 창구와 Non-ODA 창구를 구분할지 여부에 관하여 뉴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당 논의에서 PBF가 단일한 다자기금으로 남게 결정된다면 ODA 계상비율은 2008년 작업반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됨

라. IFFIm과 AMCs 에 대한 지원

■ IFFIm과 AMCs 에 대한 지원도 ODA 계상 가능하도록 원안 통과되었으며 해당 기구들에 대한 지원의 특성 상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ODA 계상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구들에 대해서 주석을 통해 주의사항을 명시하기로 함

■ 한편, 57차 작업반회의에서 제안되었던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 리스트 전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다시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일본 Mr Shoji의 주도로 스위스, 캐나다가 작업그룹으로 함께 재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보고함. 검토 기준은 해당 기구의 명칭과 임무확인 그리고 계상가능 기구 결정기준(임무, 회원국, 연간예산규모) 등의 검토임. OAU 및 AU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ODA 계상비율 설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재검토 결과는 2008년 6월 작업반회의에서 승인에 부쳐지게 됨

9. 파리선언의 정의 및 측정방법

■ 오스트리아와 호주의 파리선언 지표 이행결과 보고의 문제제기와 관련, 회원국들은 파리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행결과 설문조사의 시기적 문제점 및 월별 환율적용, 개념정의의 명확성 부족과 해석의 일관성 부재 문제를 언급

■ 스웨덴은 파리선언의 지표는 수원국의 발전계획 수립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여국과의 상호책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일본은 프로그램 접근방식(PBA)에 대한 획일적 개념정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을 언급

■ 덴마크는 용어정의의 문제를 강조하며 파리선언에서 원조조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Budget Support)뿐만 아니라 다른 원조형태들도 중요한 만큼 예산지원에 대한 정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독일은 설문조사가 ODA 예비통계와 확정통계가 나오는 중간 시점에 이루어져서 관련 통계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적 낭비와 자료의 신뢰성 저하를 가져왔음을 언급

■ 2006년도에 실시된 파리선언 이행설문 조사 시에 수원국 현지로부터 어려움을 보고 받은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이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본부로 전달 받지 못했던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이 있었음. 전자 그룹의 국가들은 본부 차원에서 성과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을 피력

■ 사무국은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분석자료 작성에 사의를 표명하고 해당 내용이 차기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Joint Venture 회의에서 논의될 것임을 설명

※ 2006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자료에서 한국은 34개국 중 3개국에서 전체 ODA 중 4%에 해당하는 지원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았는데 10개 항목 중 기술협력 관련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공여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치 달성(baseline)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음

(www.oecd.org/dac/effectiveness/monitoring 및 별첨자료 참조)

10. 분쟁, 평화 및 치안관련 지출

■ 사무국은 지금까지 종합한 각국의 관련 보고사례 외에 추가적인 사례 취합과 부분적인 수정작업을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임을 보고함. 추가적으로 사례

를 제공한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사의를 표명하였음

11. Rio 마커 업데이트

■ Rio 마커에 대한 테스트 보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해당 마커에 대한 보고를 지속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건별통계 보고에서 마커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각 국은 건별통계에서 해당 마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에 공감하였으며 덴마크는 년 1회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간 개별실적자료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이에 EC는 기본적으로 CRS 원조목적코드를 바탕으로 자동생성한 뒤에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해당되지 않는 실적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음을 설명함. 네덜란드 역시 덴마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

※ 한국은 2005년 통계까지는 집계통계만 보고하여 해당 마커에 대한 실적을 별도 보고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 통합보고체계로 ODA 실적을 보고하면서 최초로 건별통계를 보고하게 되므로 관련 마커에 대한 자료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회원국들은 CDM Board에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s)을 신청할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무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받음

■ 일본은 관련 프로젝트 정보와 CER의 ODA 계상 처리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함. CDM 관련 ODA프로젝트에서 CER을 신청할 경우 그 만큼 ODA 계상실적을 차감하기로 되어있으나 일본은 해당 사업에서 CER을 시장가격을 주고 구매한 경우이므로 ODA 계상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3. 부채 보고 개선 추진 경과 및 계획

■ 사무국은 ODA 부채에 대한 자료 집계작업을 재개하였으며 개별적인 회원국과의 확인을 통해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개도국의 총 부채 규모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2003년과 2004년의 자료의 차이들을 해결할 계획임을 보고

14. CRS 원조목적코드 변경안

가. 거버넌스

■ GOVNET은 지난 5년간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실적이 300% 정도 증가할 만큼 중요성이 커져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CRS 원조목적코드의 15000번 대의 코드들은 민주화, 반부패 및 이주 등의 이슈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원조목적코드의 추가, 거버넌스 마커의 도입 등을 통해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증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함

■ 이와 관련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많은 하위 코드들의 생성은 실질적으로 해당 코드들에 대한 실적보고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측면의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마커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의장은 무역을 위한 원조실적 집계도 5년 전 논의되었을 때 DAC 외부통계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가 결국 다시 OECD의 건별통계시스템으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GOVNET 테스크 팀은 2008년 작업반회의의 검토를 위해 보완된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통계작업반 사무국 외에 회원국 중 EC,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등이 함께 참여하기로 함

나. 무역을 위한 개발원조(Aid for Trade)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도국의 무역참여 및 무역을 통한 개발 역량 강화가 이슈가 되었고 이후 도하 라운드에서는 WTO와 OECD가 공동으로 해당 이슈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여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 TCBDB(Trade Capacity Building DB)를 통해 집계된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음. 최근 DAC의 무역위원회의 및 WTO/OECD TCBDB 작업그룹의 공동회의에서 CRS 건별 통계를 통해 무역관련 원조 실적을 집계하도록 합의하였음. 이를 통해 2008년도부터 2007년도 실적에 대한 TCBDB 별도 보고는 없어지게 됨

■ CRS 통계를 통한 무역관련 실적 집계를 위해 원조목적코드 중 33110 하위에 3316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와 33162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를

추가하고, 무역개발 마커를 도입하며, 51000 일반예산지원 하위에 51020 무역관련 조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

■ 회원국들은 원조목적코드 추가에는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마커 도입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지지를 보류한 국가들이 있었으며, 무역관련 예산 지원을 무역분야 하위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지원 하위에 두는 것으로 하였음

■ 2007년 실적에 대해서는 무역관련 원조실적을 CRS 건별통계를 통해서 산출해야 하는 상황인바 서면으로 후속 제안 승인을 진행하기로 함

※ 한국은 2005년도부터 제네바 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KOICA에서 TCB 실적자료를 DAC 및 WTO 에 제출하고 있으며 별도 보고가 필요 없는 2007년도 실적부터는 건별통계를 통해서 해당 실적이 보고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가 필요함

다. 전염성질병

■ MDG에 명시된 말라리아와 결핵과 관련된 지원 실적 모니터링을 위해 원조목적코드 중 12250 하위에 12262 말라리아 컨트롤 12263 결핵 컨트롤 코드를 추가하는 데에는 합의하였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250의 설명에 성전염병을 제외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함. 한편, 아동보건 부문의 실적 추적을 위해 사업설명부분에 "Child Health"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회의적 의견이 있었으나 권고사항으로 우선적 시행 후 1년 뒤 다시 검토하기로 함

15. UNAIDS

■ UNAIDS는 매년 5월 G8 보고를 위해 분기별 실적자료를 통해 전년도 지출실적과 향후 계획된 지원계획내용을 CRS 건별통계에서 얻고자 희망함을 보고함

■ 회원국들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분기별로 또한 5월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HIV/AIDS 코드를 예방과 치료로 나누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좀 더 진전된 관련 제안은 향후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16. 원조수행 채널코드(Channel of delivery codes)

■ 네덜란드는 DAC 통계작성지침의 Annex 2와 CRS 통계작성지침의 Annex 6 에 차이를 조정하여 통합통계보고체계의 원조수행 채널코드를 단일화 하고 해당 코드를 6자리 코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

■ 개별코드를 부여하는 것과 제안과 같이 코드 자체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한국 역시 하나의 국제기구 리스트를 만드는 데에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단, 이미 합의 된 바 있는 통합보고체계 상의 코드 리스트를 기초로 신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코드 자체의 변경 및 코드 자리수의 변경은 신중히 결정해야할 입장임을 밝힘. 이에 단일 리스트 통합은 추진하되 제안된 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기존 CRS++ 지침의 코드리스트를 기초로 활용하기로 함

■ 본 논의는 공식회의 이후 13일(수) 워크샵에서 재논의되었으며 한국의 요청에 따라 코드리스트 단일화에 따른 CRS++ 지침 중 해당 리스트의 변경사항은 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 별도 공지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17. 집계통계와 건별통계의 통합 (Convergence)

■ 사무국은 통합보고체계(CRS++)의 테스트 단계에서 실적산출 단계로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구체적 논의는 13일 워크샵으로 대체하기로 함

■ 13일 워크샵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은 이미 통합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6년도 실적 자료도 통합보고형식으로 보고예정임을 밝힘

■ 덴마크, 호주, 스페인 등은 2006년도에 통합보고체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은 부분적으로 추진 및 준비중임을 밝힘. 뉴질랜드, 노르웨이, EC, 독일, 네덜란드, 한국은 통합작업을 추진 중이며 2006년 실적에 대해서 CRS++ 형태로 보고예정임을 표명함

※ 한국은 2006년도 실적에 대한 ODA 확정통계 보고 시 통합보고체계(CRS++)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임. KOICA는 2월 회의 시 2005년도 KOICA의 실적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했음. 수출입은행에서도 CRS++ 보고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기관간 협력 하에 2006년도 실적부터 통합보고체계 적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18. 사적흐름(Private Flows) 보고 개선

■ NGO 및 기타 민간기구에 대한, NGO 및 기타 민간기구를 통한 원조흐름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민간부문의 원조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개선을 위해 각국의 해당 실적을 재검토 해 줄 것과 해당 실적에 대한 각국

의 보고자료 취합 방식 및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19. 그리스의 간접교육비용 관련 통계작성지침 변경 요청안 검토

■ 그리스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간접교육비용의 비율을 ODA로 계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덴마크, 뉴질랜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작성지침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음

20. OECD DAC 통계사무국 조직개편안 보고

■ 통계사무국은 원조의 새로운 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고 4개의 섹션으로 재조정하였음을 보고

통계 및 모니터링부

- 실적집계섹션
- 통계정책 및 Non-DAC 공여국 통계섹션
- 원조확대(Scaling Up) 및 원조체계섹션
- IT 조정 및 지원섹션

21. OECD.STAT 시스템 관련 피드백 및 개선안

■ 사무국은 회원국들로부터 전달받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OECD.STAT (www.oecd.org/dac/stats/idsonline) 통계시스템 개선작업에 대해 보고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

22. 2008년 회의 일정

■ 59차 통계작업반 공식회의는 2008년 6월 12(화)-13(수) 양일 간 열리며 비공식 회의는 2008년 2월이나 3월 중 열릴 예정임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 개요
: IFFIm, UNITAID

Ⅰ. 논의 도출배경

1. 전통적인 개발재원 논의

■ '01년 UN은 천년개발목표(MDGs)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8가지 과제와 동 과제의 해결시한(2015년)을 제시

■ '02.3월 '개발재원에 관한 몬테레이 회의'를 통해 UN은 M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재원을 논의

– 동 회의결과 MDGs 달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서약을 담은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출

– 개발재원 동원방안으로는 ODA 확대 · 무역증진 · 해외직접투자, 국내재원조달 등이 논의

①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② 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③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④ 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⑤ external debt (relief)

⑥ addressing system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s in support of development

2.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등장

■ 이후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언급된 재원동원 방안(특히 ODA 확대)만으로는 MDGs 달성이

힘들다는 인식이 제기

– 이에 따라 브라질 룰라 대통령 주도하에 04.9월 "기아와 빈곤퇴치에 관한 뉴욕선언"이 발표되어, 기존 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필요성이 제기

■ '05.9월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뉴욕선언"을 통해 다양한 혁신적 개발재원이 언급

– 동 선언에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항공권 연대기여금"(air ticket solidarity contribution) 및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금"(International Financial Facility: IFF) 논의가 포함

3. 항공권 연대 기여금 도입

■ '06.2월 프랑스는 "혁신적 개발재원 파리 각료급회의" 개최를 통해 프랑스의 혁신적 개발재원의 하나로 '항공권 연대 기여금' 도입을 발표하고 여타국의 동참을 촉구

– 동 회의 계기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설치

■ '06.9월 혁신적 개발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창설

– 동 기구는 개도국의 에이즈 · 말라리아 · 결핵 퇴치를 지원

Ⅱ. 주요 혁신적 개발재원(예)

1. 항공권 연대 기여금(프랑스 주도)

■ 항공권에 소액의 연대 기여금을 부과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 프랑스 주도로 논의 중 이며 일부 국가는 도입 및 시행중

– 프랑스, 칠레, 사이프러스 등이 도입, 시행중

– 우리나라는 '07.3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모금을 위한 법률을 제정, 07.10월초부터 시행예정

• '06.9월 항공권 연대 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설

※UNITAID 개요 참고

– 우리나라도 동 기구에 집행이사국으로 참여 중

2. 국제금융기금(IFF)(영국 주도)

■ 공여국들의 지원공약에 기초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 이를 원조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채권의 기본적인 문제점 내재

• IFF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IFFIm(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이 '06.1월 설치, '06.11월 채

권발행시작

※IFFIm 개요 참고

3. 개발을 위한 외환 거래세

■ 국제적 외환거래에 과세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 금융거래 규모 감안 시 대규모 개발재원 확보가 가능하나 적극적 도입은 현재로서는 난망

– 과세로 인한 금융거래 위축, 외환자유화 추세에 역류, 이중과세의 위험 등

• 현재 개발을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4. 선 시 장 공 약 (Advanced Market Commitments) – 이탈리아 주도

■ 개도국에 필요한 의약품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수요자의 구매력미비로 백신개발(공급)의 유인이 없는 시장실패 상황

■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여국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우선 약속하고 제약회사는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의약품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

■ 현재도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불평등 심화 시킨다는 비판 존재

• '07.2월 5개국(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및 Gates 재단은 약 15억 규모의 AMC를 발족

– 폐렴 및 뇌수막염 관련 새로운 백신개발에 사용예정

5. 기타 혁신적 개발재원

■ 이민자 송금편의 제공(송금수수료 인하), 개발재원 특별인출권(SDR) 발행, 민관공동 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발복권 등

•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개발재원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 존재

Ⅲ.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1. 출범 배경

■ '06.2.28-3.1간 파리에서 개최된 "혁신적 개발재원 파리 각료급회의"(Paris Conference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계기, 38개국의 참여로 리딩그룹 창설

–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2. 그간의 성과

■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 및 혁신적 지원메커니즘 확대

- 주요 리딩그룹 회원국은 항공권 연대 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을 도입 중
  - 항공권 연대 기여금 도입국 확대 및 이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출범('06.9월)
- 또한 구체적인 혁신적 개발재원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CO2 tax, Passenger Duty Tax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지원메커니즘(AMC, IFFIm 등)을 도입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중장기적인 안정성 제고위해 노력 중
  - 국제금융기금의 개념을 구체화한 국제백신금융기금(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출범
  - 선시장공약(AMC: Advanced Market Commitmen)을 구체화하여 07.2월 출범

■ 리딩그룹 총회 개최

- '06.7월 및 '07.2월 각각 제1차(브라질) 및 2차 총회(노르웨이)개최
  - '06.3-8월간 및 '06.9 - '07.2월간 각각 브라질 및 노르웨이가 리딩그룹 의장국 수임
- 우리나라는 '07.3.1 - '07.9.15간 제3대 리딩그룹 의장국 수임 중

■ 참여국 확대

- 06.3월 최초 출범 시 38개국으로 시작하였으나 07.5월 현재 47개국으로 확대

Ⅰ. IFFIm 개요

1. 개 요

■ 전 세계 70개의 개도국에 백신활동을 펼치는 GAVI Alliance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2006년 설립된 새로운 다자개발기구이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국내법에 의거

■ 공여국정부(현재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공여서약이 재정적 기반

- 브라질도 2007년 말 이전에 참여예정

■ World Bank가 Treasury Manager, Goldman Sachs가 Financial Advisor의 역할 수행중

■ 공여국의 서약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

■ 실제 프로그램은 GAVI Alliance를 통해 이행

※ GAVI Alliance : 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sation Alliance

– 5개의 별개의 기구(entity)가 1개의 사무국을 구성, 연합(Alliance)하여 운영되는 형태
  • the GAVI Alliance(제네바 소재, UNICEF가 hosting organisation)
  • the GAVI Fund (위싱턴 소재)
  • IFFIm (영국 소재)
  • the GAVI Fund Affiliate (영국 소재)
  • the GAVI Foundation (제네바 소재)

2. 창설 배경

■ 2003년 영국 재무부와 DFID는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IFF) 설치를 제안
– M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00억불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에 착안

■ IFFIm은 IFF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2006년 개시

3. Governance

가. 사무국

■ GAVI 사무국이 IFFIm 사무국 기능수행
– GAVI 사무국은 IFFIm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 위해 창설된 IFFIm 이사회와 GAVI Fund Affiliate 이사회 모두를 지원 중

나. 이사회

■ IFFIm Company의 관리 담당

■ GAVI Fund Affiliate가 제출한 지원요청을 검토 및 승인
– IFFIm Company는 IFFIm이 영국 국내법에 의해 자선단체로 등록된 명칭

■ 구성
– Dr. Alan R. Gillespie (의장, 영국)
– Michele Boccoz (프랑스)
– 기타 상호보증법인(Standard Life Assurance Company), 로펌(Asian Pathfinder Legal Consultancy and Drafting Service), ADB 대표로 구성

■ 1년에 총 4회의 이사회 개최

4. 활동

■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불 미만인 70개 개도국의 5살 이하 어린이에 백신제공 및 서비스 제공
–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underused) 신규 백신제공
– 백신제공 서비스 강화
  • 전통적인 백신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및 새로운 백신의 관리 및 전달

■ World Bank가 Treasury advisor의 역할

5. 재정적 배경

■ 기여 서약 : 6개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
- 영국 : 향후 20년간 총 13억8천만 파운드 서약
- 프랑스 : 향후 20년간 총 3억7천만 유로 서약, 향후 20년간 최대 9억2천만 유로 추가서약 가능
- 이탈리아 : 향후 20년간 총 4억7천만 유로 서약
- 페인 : 향후 20년간 총 1억9천만 유로 서약
- 스웨덴 : 향후 15년간 총 2억7천67백만 크로네 서약
- 노르웨이 : 향후 5년간 총 2천7백만불 서약
- 남아공, 브라질 등이 추가서약 예정

■ 채권 발행
- FitchRatings, Moody's Investor Service, Standard & Poor's를 통해 채권을 발행(각각 AAA/Aaa/AAA)

■ 운영 flow
- 공여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에 기초하여 기여약속 이행
- IFFIm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트리플 A 채권을 발행
- Treasury manager(WB)은 채권판매수입을 유동성 있는 투자형태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지출
- IFFIm은 GAVI가 승인한 사업 지원을 위해 GAVI Fund Affiliate로 자금이체 하는 형태
- IFFIm은 추후 공여국들의 기여액을 활용하여 채권보유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산

■ 채권발행 현황
- 2006.11.14 최초 채권발행
- 구매자(투자자) : 각국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35%), 펀드매니저(23%), 연금펀드(23%), Retail(8%), 기타 은행(6%), 보험사(3%)
- 투자자의 지역적 배분 : US(36%), 아시아·중동(23%), 영국(12%), 스위스(8%), 기타 유럽지역(21%)
- 주요 개인투자자 : 교황 베네딕트 16세, 요르단 왕비, 캔터베리 대주교, Bono, Bob Geldof 등

6. IFFIm의 의의

■ 그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의 부족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백신활동의 큰 장애로 작용

■ IFFIm을 통해 필요한 예산과 공여국들의 실제기여와의 시간차를 메우는 것이 가능

■ 개도국과 백신제조업자가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활동 가능하여 효율성 증진

※ IFF에 대한 비판적 시각

-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채권의 기본적인 문제점

-기여의 총액은 불변

Ⅱ.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 개요

1. 창설 배경

■ '06.2월 파리에서 개최된「혁신적 개발재원 파리 각료급회의」계기, 프랑스측은 항공권 연대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HIV/AIDS 등 질병퇴치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 매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

- 동 회의 계기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수렴하고 주도할「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도 설치

■ '06.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echnical Meeting을 통해 HIV/AIDS · 말라리아 · 결핵 등 3대 질병퇴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약품구매기구(IDPF, 이후 UNITAID로 개칭) 창설을 협의

- 프랑스, 브라질, 칠레 등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의 주요 회원국 및 제약회사(generic companies), NGOs 등이 동 협의에 참여

■ '06.9.19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설 및 공식 활동 시작

- 핵심 5개국(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 및 WHO간 WHO의 후원기구(Hosting Organisation)의 역할을 인정하는 협정체결

2. UNITAID의 특성

가. 목적 및 원칙

■ 양질의 의약품과 진단제제에 대한 가격인하를 통해 개도국민의 HIV/AIDS · 결핵 · 말라리아 치료기회 확대(scale up access)를 추구

■ UNITAID는 이러한 의약품과 진단제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가격인하와 공급확대를 위한 시장기제에 영향력 창출

■ UNITAID는 기존 기구와 메커니즘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기구의 역할에 대한 보완을 추구

■ 따라서 UNITAID 새로운 법인격이 아니라 WHO가 후원기구(Hosting Organisation)로서 사무국의 역할보조

나. 기본 운영 메커니즘

■ UNITAID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립은 지양하고 WHO, Global Fund, UNICEF 등 기존 국제기구의 expertise와 조직을 활용하여 운용비용을 최소화하고 기능적 중복을 방지

- 이에 따라 기존 개발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의 partnership 구축을 통해, 기구 및 NGO측에서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이에 대해 재정지원
- 이에 따라 WHO측이 UNITAID 사무국을 유치(Hosting)하고 UNITAID 활동전반에 관해 협조체제를 구축
- UNITAID 이사국과 WHO는 동 내용을 담은 협정체결

다. 운영 재원

■ 항공권 연대 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되 기존의 ODA 재원도 장기 공여서약의 형태로 재원으로 활용

- 프랑스는 자국 항공권 연대 기여금 수입의 90%를 UNITAID에 기여
- 영국은 항공권에 부과되는 passenger duty 수입의 일부를 UNITAID에 기여
- 노르웨이는 항공연료에 부과되는 CO2 배출세 수입의 일부를 UNITAID에 기여 등

※ 우리나라는 '06.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도입되는 경우 동 수입의 상당부분(substantial amount)을 UNITAID에 기여하겠다고 언급

3. UNITAID 구성 및 활동

가.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 11개 member(프랑스, 영국, 브라질, 칠레, 노르웨이, 한국, AU, WHO, NGO 2개, Gates 재단)로 구성

- 이사회 확대방안 및 governance structure 등에 관해서는 이사국간 지속 협의 중
- Gates 재단은 '07.5.7 - 9간 개최된 제4차 집행이사회에서 11번째 집행이사로 선출

■ 이사회 의장은 D. Blazy 전 프랑스 외교장관이 수임 중

- '06.10월 개최된 제1차 집행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 '07.3월 개최된 제3차 집행이사회에서 향후 2년 임기로 재선출

나. 사무국(Secritariat)

■ 제네바 WHO 본부내에 소규모 임시사무국을 구성 중

■ '07.3.8(목)-9(금)간 개최된 제3차 UNITAID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Meeting)에서

브라질 출신 Dr. Jorge Bermudez(현 WHO 미주사무소장(Unit Chief))가 사무국장으로 선출

■ '07.3월 현재 기타 사무국 직원 선발절차 진행 중이며 '07.9월 이전에 사무국 구성 완료예정

– 사무국 구성 등은 WHO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며, 직원은 WHO 직원으로 인정

다. 그간의 활동

■ 06.10월 제1차, 06.11월 제2차, 07.3월 제3차 집행이사회 개최

– 우리나라는 제2차 집행이사회 직전에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제2차 회의부터 참석 중

■ '07.5.7 – 9간 제네바에서 제4차 집행이사회 개최

■ '07.7.9 – 10 제5차 집행이사회 개최 예정 (잠정)

라오스 원조동향

I. 국제기구 및 NGO

1. 세계은행 라오스 지원

■ 세계은행은 빈곤탈출을 위해 16개 프로젝트에 200백만불을 지원 예정

■ 주요 지원분야는 주재국 사회개발계획에 부응하는 통신기간시설 확충, 농업, 교육, 공공보건, 에너지, 금융 체재정비

■ 또한 세계은행은 2005년 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12억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라오 정부와 2005-2008년 지원 전략을 수립, 분기별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2007년에는 4개 프로젝트에 23백만불을 투입할 계획으로 빈곤퇴치 3차 사업인 금융시스템 정비, 캄무안주 환경개선 및 주변국으로의 전기 판매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2008년에는 20백만불 규모로 빈곤퇴치를 위한 4단계 분야별 개발, 2차 농촌하부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

2. Unicef 39백만불 무상원조 제공

■ 유니세프는 2007-2011 Country Action Plan에 따라 6개 프로젝트에 39백만불을 아동교육, 지역사회개발, 식수 위생프로그램, 아동보호, AIDS프로그램 등에 지원키로 함

■ 동 지원은 라오스의 빈곤탈출과 MDG 목표달성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Unicef는 1952년 대라오스 원조를 시작하여 1973년에는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설

■ 그간 Unicef 프로젝트는 아동 생존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나 1992-1996년 사이에는 25.6백만불, 1998-2002년에는 28.6백만불을 지원하였음

3. WFP HIV/AIDS 확산 방지 지원

■ 주재국의 성인 인구 0.1%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HIV/AIDS 감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에 WFP(World Food Program)는 주재국 2006-2010 AIDS/STI 방지 Action Plan에 의거 HIV/AIDS 인식 캠페인. 여성 및 약재판매자, 매춘부 등 국경 부근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별로 교육실시할 계획임. 대상 지역은 우돔사이, 루앙남타, 타켁, 팍세

4. ADB 주재국 축산분야 개발 지원

■ ADB가 고산지역 소수종족 대상으로 10백만불을 지원하여 400개의 빈곤 마을 17,000명에게 수혜가 돌아갈 전망

■ 동 프로젝트는 의사 결정과정, 수행 등에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인 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효과를 최대화 시킬 계획이며 축산 생산물의 시장접근성 개선, 생산물 교역 체계 개선이 주요 목적임

■ 총예산 10백만불 중 9.3백만불은 유상으로 0.7백만불은 무상으로 지원됨. 8년 거치 32년간 1.5%의 저리 지원으로 스위스도 동 프로젝트에 3백만불을 지원할 계획임

5. SEDIF 60만불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 지원

■ SEDIF(Le Syndicat des Eaux d'Ile de France)가 소규모 도시 식수 및 위생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2.8자로 MOU를 체결함

■ 동 프로젝트는 주재국 정부 계획 하에 도시지역의 작은 "군"을 대상으로 주민, 공공기관 협력 하에 급수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04-2006년까지 SEDIF는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10만불을 투입, 비엔티엔주 6개 마을 1천 가구 6천명에게 급수시설을 지원함

II. 주요 원조 공여국

1. 일본

가. 빈곤퇴치를 위한 4백만불 지원

■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ese Bank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4백만불을 제2차 빈곤퇴치운영기금(Poverty Reduction Support Operation 2)으로 차관을 제공키로 함

■ 2004. 7월 라오스 정부 빈곤퇴치 전략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 빈곤퇴치운영기금에는 세계은행도 지원하고 있고 총 투자 규모는 12.2백만불로 일본국제협력은행은 금번에 처음 지원함

■ 동 지원은 공공분야 재정지출 재정비, 민간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관리능력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라오스는 연간 7%의 GDP 성장율의 꾸준한 유지로 지난 10년간 10% 빈곤층이 감소하였지만 현재 총인구의 33.5%인 빈곤층이 1.9백만명으로 추산되며 공공 보건분야 개선, 기초교육기회 확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유지, 고용율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JIBC는 빈곤퇴치를 위하여 15백만 불을 투입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사바나켓 태국 묵다한 국경교량 건설이 있음

나. 라오문화 센터 지원

■ 일본은 비엔티엔 라-일 문화교육센터 내에 섬유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82천불을 지원할 계획임. 동 센터에서는 라오스 학생들 대상으로 자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라오스 전통악기, 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신축되는 동 박물관에는 오래된 실크 등 섬유제품들도 전시할 계획임

다. 2.6백만불 쌀 지원

■ 일본은 2006년에 체결된 Kennedy round 1에 따라 홍수, 해충 등 자연재해피해 농가에 쌀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은 1978년부터 대 라오스 원조를 실시해 오고 있음

2. 스웨덴 SIDA 비엔티엔주에 지방도로 건설 지원

■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는 비엔티엔주 사나캄, 힌업, 토라콤, 폰홍 및 사이솜분 지역 도로건설에 30만불을 지원키로 함. 돈꾸앗마을에서 농콘까지 23.5km, 폰홍에서 후아이두아 10km, 톨라콤에서 나콩까지 10km구간을 건립하게 되며 6월말 종료될 계획

3. 프랑스 AFD 1.2백불 지원

■ 프랑스(Agence Francaise de Developpment) 관개수리 기술지원(자문)에 1.2 백만불을 지원함. 프랑스는 10년 이상 동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관개수리 기술 자문, 관개수리시설 건립함. 또한, 주재국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의거 지역개발을 위한 관개수리의 현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주, 군단위의 관개 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

[자료: 주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사관]

파키스탄 개발포럼

Ⅰ. 주요 내용

■ 금번 포럼은 "Demographic Dividend – Unleashing the Human Capital"을 주제로 개최된 바, 파키스탄 정부 측은 빈곤퇴치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총 11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소개

– 특히, 특별 세션으로 FATA 개발포럼을 개최하여 아프가니스탄 접경 저개발 FATA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은 파키스탄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파키스탄 정부가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강조

– 특히, FATA 개발계획과 관련, 동 지역의 치안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지적

■ 금번 포럼은 파키스탄의 빈곤퇴치, 산업발전, 내수와 무역, 수자원 및 전력, 도시와 농촌 등 각종 분야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다만, 금번 포럼은 파키스탄 인구구성의 변화를 어떻게 인적자본의 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특히, Demographic Dividend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확대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 접근 미흡

Ⅱ. 상세 내용

1. 개막식 연설자 및 연설 주요내용

가. Shaukat Aziz 파키스탄 총리

■ 파키스탄의 2005/6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7%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며, 1인당 소득은 95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은 사회의 모든 분야와 전국 각지로 미치고 있음
- 실업률은 2001/2간 8.3%에서 2005/6간 6.2%로 감소하였으며, 2003-6년간 약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절대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001년 34.5%에서 2005년 23.9%로 감소하여, 총 1,300만명이 빈곤상태에서 탈출

■ 지진피해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함. 국제사회가 지원을 약속한 56억불 중 지금까지 29억불이 집행되었으며, 모두 12개 구역에서 재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

■ 파키스탄의 1억 6천만 인구는 최대의 자산임. 인구의 과반수가 19세 이하이고, 약 1억명이 25세 이하인 바, 파키스탄은 젊은 세대가 노동인력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Demographic Dividend를 얻을 수 있게 됨

■ 발전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임. 문맹률은 2001년 55%에서 2006년 46%로 감소함

나. Praful Patel 세계은행 부총재

■ 파키스탄이 거시경제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와 경쟁력 면에서 여전히 취약성이 있음. 거시경제의 안정은 파키스탄의 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전략적 토대가 되어야 함

■ 파키스탄의 빈곤퇴치에 그간 성과가 있는 바, 세계은행은 2015년까지 극심한 가난을 제거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에 협력할 것임

■ 일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투자 유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파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에 협력할 것임

다. Liqun Jin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 가난에 시달리는 FATA 부족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한 관심이 필요함.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인접국가와의 교역 증진을 위한 것임

■ 아시아개발은행이 원조하는 6,000만불 규모

FATA 지역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FATA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는 지역의 치안상황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함

라. Ahmad Mohammad Ali 이슬람개발은행 총재

■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며, 향후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약속

2. 세션별 의제 및 주요내용

가. 일반세션 주요 의제 및 내용

1)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and the Demographic Dividend

■ 파키스탄 정부 측은 ①거시경제의 안정 ②경쟁상 우위 활용 ③인적 잠재력 개발 ④금융분야의 역할 ⑤세계 수준의 인프라 구축 ⑥효율적 거버넌스 ⑦가난하고 취약한 계층 대상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전략보고서(초안)을 소개하고, 2010/11 회계연도까지 향후 4년간 국민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목표를 제시

- 2010/11년도 7.5%의 GDP 성장률 및 5%의 물가상승률 목표 제시

2) Industrial Growth : Moving up the Competitiveness Curve

■ 파키스탄 정부 측은 분야별 기술 증진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민관협력 및 농촌기업 현대화의 차원에서 One Village One Product 개념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3) National Trade Corridor

■ 파키스탄 정부 측은 현재의 낙후된 철로, 도로, 항만, 공항시설로는 연간 7-8%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고, 향후 6년간 60억불을 투자하여 국내 물류망을 보강하고 물류수송능력을 제고하는 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

4) Water, Power and Prosperity

■ 파키스탄 정부 측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수자원 및 전력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Diamer-Bhasha, Kalabagh, Akhori, Munda, Kuram 등 대규모 댐 공사에 개발파트너들이 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세계은행측은 단순한 수자원의 배분 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이익의 객관적 배분이 필요하며, 인더스 등 수자원 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가 필요하다고 주장

5) 기타

■ 파키스탄 정부 측은 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온 내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농촌경제의 발전이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소개

■ 또한 파키스탄 정부 측은 현재 GDP의 4%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에 투입중이며, 향후 5년 이내에 이를 8%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금융분야 개혁 현황 및 마이크로 금융 수혜대상 확대 계획 등을 소개

나. 특별세션 : FATA Development Forum

■ 파키스탄 정부 측은 32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FATA 부족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5년간 동 지역의 보건, 교육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총 20억불의 자금 중 약 10억불이 아직 조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지원을 요청

■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조치만으로는 FATA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부족지역의 치안상황 개선과 정치개혁, 그리고 NGO의 역할이 필요함을 지적

–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 표명

3.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반응 및 평가

가. 세계은행

■ 세계은행측은 파키스탄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특히 농촌빈곤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 요인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잠재적 경제성장 제약요인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나. 아시아개발은행

■ 아시아개발은행측은 FATA 개발계획 등 파키스탄 정부의 여러 개발계획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다. EU

■ EU측은 파키스탄의 경제와 정치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요청하고,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 우려를 표명

라. 미국

■ 미국 측은 파키스탄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보건, 거버넌스, 경제성장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 파키스탄의 FATA 개발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위해 다른 개발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미국 측은 향후 5년간 FATA 개발에 7억 5천만불 지원을 약속

마. 기타

■ 캐나다측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계획의 이행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원조의 효율성은 수원국이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

■ 스위스측은 파키스탄이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예산을 GDP의 4%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

4. 관찰 및 평가

■ 금번 포럼은 Demographic Dividend – Unleashing the Human Capital을 주제로 채택한 바, 이는 파키스탄의 15세에서 60세 사이 경제인구가 1981년 48%에서 2006년 57%로 확대된 반면 피부양 인구는 44%에서 37%로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구성의 변화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됨

■ 금번 포럼은 파키스탄의 산업발전, 내수와 무역, 수자원 및 전력, 도시와 농촌 등 각종 분야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소개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 및 원조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금번 포럼은 포럼 주제와 세션별 의제간 연관성을 부각하지 못한 바, 파키스탄의 인구구성 변화를 어떻게 인적자본의 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문맹률이 높고 여성인력의 활용이 제한된 파키스탄의 현실에서 Demographic Dividend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확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무엇보다 긴요하지만, 금번 포럼은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접근을 하지 않고 있음

■ 한편, 파키스탄 정부 측은 저개발 FATA 부족지역을 위한 특별 세션으로 “Fata Development Forum”을 개최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과 원조국가들의 관심

을 유도하였으나, 동 지역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관한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인 바, 동 지역의 치안문제 선결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 파키스탄회교공화국대사관]

국제개발협력 2007년 제2호

발 행	2007년 7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산하기획인쇄 TEL.(02)2272-5002(代)